

2006

제1차 중앙위원회

○ 일시 : 2006년 2월 18일(토) 오후2시

○ 장소 : 서울

1차 중앙위원회 회순

▶ 심의 . 의결 안건

1.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인준 및 위임의 건
2. 당 쇄신안 채택의 건
3. 200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4. 2005년 결산 및 감사보고 심의의 건
5. 2006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6. 2006년 지방선거 계획 심의의 건
7. 2006년 예산안 심의의 건
8. 당규(회기 규정) 개정의 건
9. 기타 안건

▶ 보고

1. 2005년 7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2.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3. 의원단 총회 결과 보고
4. 당원현황 보고
5. 세액공제 사업 보고

식 순

□ 개회식

- 민중의례
- 개회사
- 최고위원회 인사

□ 제1차 중앙위원회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감찰 지명
- 회순 통과
- 심의 의결 안건
- 결의문 낭독
- 폐회

1차 중앙위원회

심의 · 의결 안건

1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인준 및 위임의 건

■ 주문 사항

1.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를 인준하여 주십시오.
2. 2006년 1차 중앙위 이후의 지방선거 공직후보 인준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해 주십시오.

□ 개요

- 공직후보의 인준권은 중앙위원회에 있음
- 2006년 2월 18일 2006년 1차 중앙위 시기까지 선출된 지방선거 공직후보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증해야 함
- 2006년 1차 중앙위 이후 선출된 후보는 중앙위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인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에 인준권을 위임하여 선출된 공직후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요구됨

□ 공직후보 인준대상

2

당 쇄신안 채택의 건

■ 주문 사항

1. 제출된 당 쇄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쇄신 방안

□ 쇄신방안 토론 경과

- 비대위는 그동안 총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당 지도부로서의 기본업무와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
- 11월 13일 비대위 워크숍에서 1차 논의를 전개하고, 이에 근거해서 기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7일 6차 회의에서 추가 토론을 진행함
- 11월 21일 비대위원,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쇄신안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11월 21일 밤 쌀비준 저지 농성장에서 비대위원 및 의원단이 당 쇄신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
- 비대위는 당원 및 국민의 여론을 듣는 과정을 통해 당 쇄신방안을 구체화 해나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도부 순회, 온라인 의견수렴, 혁신포럼, 비정규 노동자 및 지도부 간담회 등을 전개한 바 있음
-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 까지 지도부 전국순회, 11월 29일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12월 3일 의원단 워크숍에서도 당 위기 및 쇄신안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쇄신의 방안을 12월 18일 중앙위에 제출하여 전당적인 토론안으로 채택하고, 전당적 토론을 거쳐 2006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바 있음
- 이후 당직선거 등으로 토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도당, 지역위별 토론과 2기 지도부의 토론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임

□ 무엇이 위기 인가?

1) 당의 현황

-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총선을 통해 원내 3당으로 진입함
- 2004년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 및 정세 상황 지속
- 10.26 재보선 패배 및 지도부 사퇴 후 비대위 구성 됨
- 당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강화 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
- 당원의 당 생활 결합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당원과 대중의 결합정도가 미약함
- 현재 당의 조직적 토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이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합해야 할 노동운동의 상황이 당에 직접 투영됨, 노동계의 비리로 인한 진보진영 전반의 도덕성이 약화되고 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 미침
-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 및 일치된 해결 방안 부재

2)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진단

- 지도부의 지도력, 당 운영의 효율성 및 일치성의 부족, 당 정책의 대중성 및 현실성 여부, 각종 정치현안 및 사안에 대한 진보정당 다운 대응의 부족, 당 지역사업의 제한성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당의 지지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본지지계층이자 전략적 조직대상인 비정규 노동자들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는 기본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 또한 사실임
- 당의 위기 진단과 관련하여 위기의 원인 및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 즉 당의 전략적 지지층이 어디이며, 이들의 당 지지 정도의 변화추이, 이들을 위한 당의 정책 및 정치활동 전개 정도, 이들의 당 조직과의 결합력 정도 등을 근거로 한 엄밀한 분석 및 대책을 요구됨
-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주노동당,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수립 및 당 활동이라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방향에서 좀더 엄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특히 당의 조직적 기반의 중심인 노동운동의 제반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함
-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어떤 특정한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임, 당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 대책을 수립하고 쇄신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쇄신방안 마련의 의미와 향후 방향

- 비대위가 완결적인 쇄신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 어려움이 있음, 다만 쇄신과 관련된 의제를 설정하고 기본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이 기본의제에 대한 당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당의 쇄신방안 마련은 회의나, 탁상에서 완결될 수 없고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집약되는 과정을 거쳐 구체화 되어야 함
- 특히 이번 중앙위에서 기본안이 채택된다면 이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질서정연하게 토론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회까지 전당적 토론이 되게하여 당 쇄신이 당원 전체의 의지와 지혜가 모아지는 방향에서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 쇄신방안이 구체화되도록 하고 나아가 당원이 쇄신의 주인으로 나설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중앙위 이후 비대위가 구체적으로 보완할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최종 쇄신안은 차기 중앙위에서 공식 채택되는 과정이 될 것임
- 차기 중앙위에서 쇄신안이 채택되면 이의 구체적 집행은 차기 지도부 중심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임

□ 쇄신의 방향 및 계획

가. 1 핵심사업

비정규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 대변을 당의 전략사업으로 분명히 하고 당력을 집중한다.

나. 3 중점사업

당 운영을 쇄신하고 지역사업을 강화하며 당의 일치성을 드높인다.

당 정책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강화한다.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사업

비정규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 대변을 당의 전략사업으로 분명히 하고 당력을 집중한다.

1) 현황

-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해결은 우리사회의 1차 과제이자 민주노동당의 가장 중심적 과제이자, 당 조직 확대의 기본방향임
- 일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비정규직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난관에 부딪쳐 있음
- 이는 정규직 중심이자, 산별로 전환하지 못하는 현 노동운동의 문제라는 한 축과 당의 비정규 조직화 방안 및 정치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즉 정규직은 사회적으로 이기적 집단으로 비쳐지는 실정이고, 민주노동당은 정규직의 대변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현실임
- 비정규 계약안 저지, 비정규 문제에 대한 일상적 선전사업 및 투쟁사업 결합 등의 사업방식, 구호에만 그치는 사업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2) 비정규직 사업강화를 위한 제도, 시스템 정비

- 당 비정규직 사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사업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임
- 지도부의 정기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을 실현하고 사업에 반영
- 비정규 사업예산 확보(중앙당 예산 확충, 기금모금, 선거환급액 일정분 사용)
- 중앙당, 시도당의 비정규 사업 시스템 강화¹⁾
- 지역위원회별 비정규 사업담당자 의무적 배치, 상담소 설치²⁾, 비정규 사업 메뉴얼 작성 및 담당자에 대한 전당적 교육(지역별 특성, 인력과 재정을 감안한 세부계획이 요구됨)
- 각 당부의 간부들의 일반노조 가입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및 관계강화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사업
- 당 의결구조에 비정규직 확대방안(노동부문 할당 중 비정규 확대 및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별 중앙당 대의원 및 해당당부 대의원 선출시 비정규직 일정비율 의무화 방안)추진

1) 노동위 사업주체 있는 시도당 : 11개 시도당(미선임 시도당 :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부산)
비정규본부 사업주체 있는 시도당 : 11개 시도당(미설치 시도당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제주)

2) 비정규 사업 주체 있는 지역위 : 79개 지역위원회(2005년 10월 현재)

3)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

-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비정규 입법 쟁취는 상당기간 불가능
- 노동계의 투쟁동력이 제한적이나 당이 전면에서 투쟁을 끌어나가고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해서 반드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투쟁 전개
- 11월말부터 중앙 농성투쟁 전개, 비대위 지도부가 앞장서고 당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농성에 참가하는 방식의 투쟁 및 전면적인 대국민 홍보 전개
- 원내 협상 및 투쟁의 병행전략을 원활하게 구사해야 함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 수립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 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적 선언식 사업을 경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함,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정규직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일단 당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토론에 근거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함
- 비대위 논의 → 민주노총 비대위와의 협의 → 공동선언 → 실질대책 수립 → 2006년 민주노총 투쟁방향 및 당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반영 → 사회 여론화 및 정부 및 경영계 압박 → 사업현실화를 통한 당의 정치력 및 지지기반 제고

중점사업 1

당 운영을 쇠신하고 지역사업을 강화하며 당의 일치성을 드높인다

○ 당 운영의 질서 확립 및 지도력 확보

-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를 관통하는 정연한 집행, 보고의 체계 확립
- 상급당부의 하급당부에 대한 관장책임 강화
- 최고지도부의 당 조직 전반 및 의원단에 대한 통합적 지도력 확보
- 대중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확보, 주요현안에 대한 공식적, 공개적 입장표명, 당 지도부의 대중 조직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관계 강화 및 정치력 강화
- 당원교육 강화, 당원의 당 생활 참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 수립
- 당 사업의 기본방식, 당 간부의 정치활동 정형 및 당원의 당생활 정형 수립
- 당 조직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진단 실시 및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앙당 시스템의 통일성 및 집행의 집중성 강화
- 합리적인 비판 및 평가 문화 정착

○ 당 지역사업 강화 및 당 기층 조직 생활력 강화

1) 현황

- 10.26 재보선을 통해 지역의 조직적 기반 없이 객관적 조건과 분위기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당 지지율에 해당하는 득표도 불가능함이 다시 분명하게 확인됨
- 이는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 활동의 기본방향, 당 조직 확대 및 지지기반 확대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문제임
- 당은 일관되게 분회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사업 활성화를 제창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당의 지역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이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당 소속 단체장, 지방의원의 활동 또한 지역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조직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음

2) 대책

-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당론에 따라 전개되도록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들의 활동이 진보정당의 정체

성에 합당하고 당의 지역조직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전개되도록 해야 함

- 지방정치, 행정이 주민을 조직하는 방향에서 전개되도록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가능한 제도를 적극 실현해야 함
- 지역사업의 모범사례 발굴 및 일반화
- 확대 간부회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지역사업 토론 및 대책수립 의 통로로 일반화한다.
- 지역위원회와 해당 지역 시민운동 등 진보진영 전체가 공동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의 구조 (지역운동 센터 등)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 과도한 정파적 대립구도 타파

1) 현황

- 특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실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음, 그러나 현재의 당내 정파구도는 노선과 정책을 두고 선명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보다는 전반적으로 과도한 대립구도로 형성되어 당의 단결 단합을 저해하고, 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원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측면에서 순 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논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음

2) 일반방향

- 특정한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조직운영의 일반원리인 민주집중의 일반원리를 철저히 관철하고, 당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정파구도가 주도권 다툼의 방향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의 노선과 정책, 주요현안 및 쟁점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
-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의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연한 집행을 보장하는 기풍을 세워야 함

3) 제도적 대책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중앙당 인사위원회 구성
- 의결기구 성원 선출 방식, 공직후보 선출 등의 과정에서 독식 구조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의 참신한 정책으로 2002 대선, 2004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음
-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 이러한 정책의 현실화, 구체화 과정을 통한 당의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은 전개되지 못했음
- 또한 주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적, 정치적 대응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슈 선점 및 당의 독자성 확보에 제한성이 있었음
- 당의 정책이 당원들이 대중을 조직하고 설득하는데 무기가 되는 방향에서 생산되고, 당원에게 전달 되는 생산과 홍보 기능이 취약함

2) 대책

- 거대담론의 현실화, 구체화 방향에서 당의 정책기능을 높여야 함, 특히 전략적 집중지점이 분명한 주요 정책과제가 설정되고 제시되어야 함
- 당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장기 과제, 시급한 과제 구분 요구됨
- 의원단, 정책위원회, 연구소 등이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방향에서 당의 전반 정책이 수립되고 기획되어야 함
-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대중적 정책생산 및 의제화
- 사회적 이슈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기동성 강화
- 원내외의 정책조정 기능 및 효율성 강화방안 마련
- 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위원장 상근 가능 조건 확보
- 정책생산 시스템 및 홍보 기능의 강화, 특히 당원에게 당 정책 및 정당성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근거로 당원이 대중을 접촉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연구 인프라 구축의 통일성 확보(원내 인프라와 원외 인프라 구축의 통일성)

1) 현황

-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비리로 인한 당의 정치적 타격
- 일부 공직자의 비리 사건 등 당내 비리 및 도덕성 훼손 사안 발생
- 진보진영의 고유한 장점인 도덕성, 청렴성 상실 기성정치권과 동일시 됨

2) 대책

(1) 기본방향

- 당 조직이 확대되고 다수의 공직자가 배출되면서 당 또한 비리, 도덕성 관련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
- 사안의 발생자체도 문제이나 발생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서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함
- 사안발생을 막는 사전 검증의 제도적 장치 강화와 함께 발생한 사안을 진보정당의 정신에 맞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규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함

(2) 대외적 대책

- 노동계 비리 등의 사안 발생시 당이 분명한 입장 및 대국민 메시지 발표
- 노동계의 정풍운동 촉구(노사교섭시 불투명한 관행 척결, 각종 선물 구입 시 공개입찰 수용 등)
- 진보진영 자정운동, 정풍운동 공동선언(당, 민주노총, 전농 등)

(3) 당내 대책

- 당 간부 및 당원, 공직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강화를 통해 진보정당 당원의 상, 당 간부의 전형,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신상필벌 강화, 모범 정립
- 지역위원장, 중앙당 실장급 이상의 당직자 및 전 공직자의 재산내역 및 취득과정 공개 의무화
- 비리 및 도덕성 훼손 관련자의 당직 및 공직 진출 금지 제도화
- 공직후보 검증 시스템 강화(선관위 제출자료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화)
- 비리 및 도덕성 훼손 사안 발생시 해당당부 지도부 및 최고지도부의 관련사건 당기위 제소 기능 의무화

■ 주문 사항

1. 제출된 2005년 사업평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 2005년 사업목표

1. 민생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다.
4. 제3당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에 맞게 내실을 강화한다.
5. 200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당적인 선거준비를 추진한다.
6. 생태환경의 파괴를 저지하고,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 사업을 강화한다.

■ 총평

- 당은 2004년 총선 승리를 통해 원내 3당으로 진입하였으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을 전개할 정치적, 조직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04년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대만큼의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2005년 사업계획을 수립함.

- 2005년은 원내 3당에 맞는 정치, 조직활동을 전개하여 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당 조직의 발전 속도도한다는 기본 목표 하에 민생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7대사업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2005년 당은 당대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반 사업을 전개하여 성과도 확보하고, 한계도 드러냄, 전반적인 문제의 기본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당 사업, 당 발전 전략과 기획의 부재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전망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이 배치되지 못하고, 현안 대응 중심의 사업에 머무른 것이 가장 중심에서 검토, 평가되어야 할 것임

- 2005년 사업을 통해 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중점사업, 부동산, 세제, 주거, 신불자, 빈곤층 등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에서 다양한 정책사업과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삼성 X-파일관련 투쟁에 앞장서는 등 진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서민정당,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세우는 성과를 남김

- 원내에서도 10석의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원칙에 입각한 투쟁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요현안 및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당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주요한 개혁 민생입법을 발의하고 사립학교법 개정등 주요 법안개정에 앞장서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남기게 됨

- 2005년 주요한 투쟁 현안이자, 대중의 요구였던 비정규직투쟁, 쌀수입개방 저지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과 당의 정치활동의 결합, 원내외의 유기적 협조와 투쟁, 지속적인 여론화 사업, 완강한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개악을 저지하였으며,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린 농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투쟁을 전개하여 대책없는 쌀 수입개방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음,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자기 위상을 굳건하게 세우는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였음

- 민주노동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간의 정당교류를 성사시켰으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 제기, 미군기지 이전반대 등 반전평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6.15, 8.15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실현에 기여함

-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인권보장, 소수자 권익보호,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의 사업과 방폐장 반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을 전개하여 인권보호와 생태환경 실현에 앞장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함

- 그럼에도 중점사업으로 전개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당의 중점 의제를 대중적 이슈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입법화하거나 구체적 성과를 남기지 못함, 이는 사업방향에 대한 혼선, 사업체계의 방만함, 당의 역량과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주도면밀한 타산의 부족으로 의제를 사회적 여론화하고 쟁점화 하는데서 시기와 쟁점의 상실, 사업 전개에 대한 세밀한 기획과 집행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임

- 독도문제, 부동산 문제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진보정당의 위상에 맞게 제 때에, 실속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정치기반을 확고히 세우는데 제한성을 드러냈음.

- 2006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2006년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여성후보 20% 실현, 지방공직자 유급화 방안 마련, 후보발굴 등의 사업을 전개함, 그러나 선거를 이끌어 갈 전략적 중심

의제 설정 및 지속적 사업전개의 미흡함과 정책적 준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남김, 동시에 선거 법개정 국면에서 일관되게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거대정당의 게리맨더링을 막고 당에 유리한 지형을 반드시 지켜야 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 당 조직발전 및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13,000여명의 당원이 증가하여 당 조직이 확대되었고,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정례화, 확대간부회의 개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원내외의 관계, 중앙당과 지역조직의 관계가 개선됨,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각급회의의 실질화 및 내실있는 운영, 각급 당 간부들의 의견을 당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는가 여부, 각급 당부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

- 당의 정치적 위상이 걸린 10.26 재보선에서 총력을 다 했음에도 패배함으로써 원내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어 당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었고,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당 안팎에 위기가 확산되게 됨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당의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전당적 토론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전당적 토론을 전개하고 있음. 당 위기의 극복은 무엇보다 당 내부의 혁신과 쇄신에 그 출발이 있음.

- 향후 당의 혁신과 쇄신을 구체화하고, 구체성있는 정책에 근거한 대국민정치활동을 강화하며, 대중운동과의 조직적 결합력을 높여나가며, 진보정당다운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집권정당으로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 사업 평가

1. 민생안정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사업

1. 정책정당.민생정당으로서의 내용을 강화한다.
2.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무상교육, 주거문제에 대한 구체적 법.제도 개선과제를 수립한다.
3. 빈부 문제 및 실업해소에 대한 사회 담론화와 정책대안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4. 실질적인 민생개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성과

- 당은 2005년 민생사업을 당의 기본사업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제별 3대과제, 주체별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사업을 전개하였음. 특히, 무상의료를 전당적 중점사업으로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사업을 결합하여 전개함.
- 이를 위해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운동본부’ 를 구성하는 한편,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과 공동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공동투쟁본부’ 를 구성하여 집회,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
- 원내에서도 무상의료 실현 7대입법안을 제출하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등을 쟁점화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성과를 남김.
- 또한,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등 당의 각 부서, 의원단 등에서 주거문제, 부동산 문제, 실업문제, 빈곤층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 민생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이슈화하고, 쟁점화하여 민생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함.

2) 한계 및 과제

- 당의 민생사업이 정책과 이슈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해당 주체와의 사업을 강화해 대중운동으로 전개하고, 이 성과가 입법적 성과, 당의 조직기반 강화라는 조직적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민생사업의 기본정형을 뚜렷이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김.

- 민생사업은 당위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성과를 남길 수 없음, 당의 전략적 조직기반 강화라는 분명한 목표하에 정책생산, 정치활동, 조직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어야 할 것임

2. 신자유주의 분쇄와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중투쟁

1.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2. 쌀 수입 개방 반대, 식량자급률법제화, 농업개방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3. FTA, 금융.서비스.교육.의료.언론 등 신자유주의적 개방반대 투쟁을 전개한다.
4. 반민생 정책에 따른 생존권 투쟁을 지지.엄호한다.

1) 성 과

- 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원내외에서 완강하게 전개함, 울산 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 현대 하이닉스 매그나칩, 기룡전자,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투쟁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을 완강하게 전개함.
- 2005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과정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실현’ ‘비정규 개악안 저지’ 를 기본으로 하는 방침을 가지고 원내에서 정치협상, 농성, 물리적 저지,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원외에서 농성, 거리연설회, 대국민홍보, 시민사회운동 진영과의 공동행동을 조직함.
- 민주노총과의 정례협의회, 공동기획단 운영,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대중투쟁과 원내활동을 결합시키는 기본 틀을 정형화 함. 한국노총과도 사안별, 시기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분할정책을 무력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노동계의 공동행동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함.
- 정부 여당의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유일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하는 정치적 성과를 남김.
- 쌀 수입개방 저지를 위해 원내외에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음. 특히, 통의통위 점거 농성,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 정치협상 등의 원내투쟁과 농성, 집회 등의 대중투쟁을 전개하여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의 면모를 정치적으로 확보함.
- 경찰의 폭력진압과 관련해서도 원내외의 정치적 노력과 투쟁을 통해 경찰청장을 사퇴시키는 정치적 성과를 남김.

- 홍콩 WTO 각료회담 저지 투쟁에 대한 조직적 참가 11월 APEC 회의 대응투쟁, DDA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투기자본 감시 및 금융세계화 저지, 공공서비스.교육.의료 사유화 저지 투쟁 등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함.

2) 한계 및 과제

- 개약안을 저지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은 확보하였으나, 결국 권리 보장 입법을 쟁취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제한적임, 10.26 재보선에서 보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태도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태세를 강화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임.
- 쌀 투쟁과정에서 쌀 비준안 처리 자체의 저지와 연기를 둘러싼 일정한 혼선이 발생하였으며, 반대에 머무르지 않는 정책대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한계를 드러내었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함. 향후 정책적 대안 마련, 농민운동과 당의 조직적 결합의 강화 등이 과제로 남게 됨.

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사업

1. 해방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 정부 및 주요 정당·사회단체간의 교류를 확대·안정화시킨다.
2.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 반대운동과 한반도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반전평화군축운동을 전개한다.
3.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반대운을 전개한다.
4.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1) 성과

- 남북해외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에 정당으로서 유일하게 조직적으로 가입하여 중앙당과 전국 각 지역에서 고문단,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등에 결합하고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건설·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었음.
-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2000년부터 추진해온 최초의 남북 정당교류를 성사시킴. 당은 일본 우경화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 조선사회민주당과 공조를 높여왔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정당교류를 성사시켰고, 양당회담, 양당 공동토론회, 조선사회민주당사 방문, 역사 유적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당 교류확대 방안’ ‘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양당의 공동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대안정당으로서 당의 위상을 높여내고, 남북 정당·정치인의 교류·연대를 공론화시켰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큰 영향을 끼침.
- 6.15민족공동위원회와 함께 연인원 10만명이 참석하고, 남북해외 정부·정당·단체가 참석하는 민족통일대축제를 성사시킴. 남측의 8.15행사는 사전대회만 치르던 것을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와 함께 3자 공동주최의 본대회(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를 개최함으로써 전당적 통일운동을 성사시키고, 통일운동에서 당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냄.
- 통외통위 담당인 권영길의원실과 자주평화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통한 북미 핵공방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세브리핑, 토론회, 특강 등을 통해 당내외의 교양사업을 전개하였다.

- 주한미군 동북아신속군으로의 성격전환 반대의 당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인터뷰,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밝히고, 평택범대위에 조직적으로 가입하여 범국민농활, 6.11촛불대행진, 촛불문화제, 7.10평화대행진, 12.11평화대행진 등을 전국 집중 또는 수도권 집중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과 미군의 대한반도, 대동북아 정책의 본질을 사회여론화 시켜냄.
- ‘미군기지 관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과 ‘미군기지 반환 예정 지역’ 을 중심으로 미군기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군기지 관련 대책과 투쟁정책, 계획을 논의하고 집행하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18광주민중항쟁 25주년 국민대회 → 6.15민족통일대축전(한반도 전쟁저지를 위한 선언운동) → 7.10 평택평화대행진 → 8.15민족대축전(반전평화대회) → 9.11맥아더 동상 투쟁’ 등 일년을 관통하는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함.
- 미국의 이라크 침략 2주년과 고김선일씨 1주기를 맞아 반미반전문화제 및 반전평화 투쟁을 전개하였고, 미국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및 임부변경 압력에 맞서 미국의 군사패권 반대와 자이툰부대 철군을 위한 원내외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제반전행동 등 반전평화 사업을 전개함.
- 2004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전국 릴레이 촛불대행진’ ‘수구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등을 개최함.

2) 한계 및 과제

-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주통일, 동북아 평화실현에 대한 당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해 전략적 단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당은 단기적인 사업이나 계기적 사업, 즉각적인 대응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통일운동에 대한 전략적 기초를 수립해야 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와 체계를 시급히 논의해야 함.
- 최초의 정당교류 성과를 이어 당의 대북사업을 안착화, 풍부히 해야하는 과제와 함께 남북 정당.정치인 교류 . 연대로 확산시키는 과제가 제기되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내에서 정당의 역할을 높여내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연대사업에서 당의 역할과 과제를 분명히 수립하여 실천해야 함.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이나 ‘주한미군 기지 문제’ ‘반전평화 운

동’ 등에서 정책의 미비, 담당주체의 부재, 집행체계의 혼선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당의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전당적 실천을 전개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 파병’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고, 사회와 국회내의 이슈화시키지 못함.

- . 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대중적 지지를 모아내는 창조적인 투쟁방식이 필요함.

4. 제3당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에 맞는 내실 강화 사업

1. 수권정당을 향한 장기적 당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2. 당원확대를 위한 10만 당원사업을 추진한다.
3. 대중정당에 걸맞게 당을 쇄신한다.
4. 원내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5. 민중진영의 정치적 대표체 역할을 강화한다.
6. 재보선 투쟁에 전당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7.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8.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한 조직화와 정책활동을 강화 한다.

1) 성과

- 대중정당에 걸맞는 당 조직 쇄신과 함께 당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집권전략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정치’ ‘조직’ ‘정책’ 을 의제로 당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정치활동 기조와 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고위원회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에서 당 쇄신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쇄신안 토론자료’ 를 채택하고, 전당적 토론을 결정하였음. 이후 전국적 토론결과를 취합하여 2006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당 쇄신안’ 으로 채택하고 전당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 10만 당원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 한해 13,000 여명의 당원이 확대되었고, 농민당원과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층에 당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당 지지를 높여내는 성과를 높였음.
-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안정화시켜 당론과 주요 현안에 원내외 입장을 일치시키는 체계가 자리를 잡는 진전이 있었으며, 파산관련 법안과 농업회생을 위한 법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의원단의 진보적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민주노총, 전농과의 정례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폭을 넓혀냄.
-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치캠프’ ‘청소년 아카데미’ 등 정치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청소년단체와 함께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음. 또한, 18세 선거권 인하운동, 학생회 법제화, 두발규제폐지운동 등을 전개하였음.
- 성소수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의제 당원 교육 및 당원용 교육자료집 발간’, ‘성소수자 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115주년 노동절에 성소수자 참가단 조직’ ‘퀴어문화제 참가’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개최’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 공동기획’ ‘여성 성소수자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고,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국정감사’ 를 처음으로 진행하였음.
-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치학교, 장애인 인권캠프’ 등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제 장애인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장추련과 연대하여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입법 발의하였음.

2) 한계

- 최고위원회의 총사퇴 이후 집권전략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원래의 취지대로 최종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음. 당의 집권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전 당원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 쇄신안’ 을 채택해야 하며, 더불어 당 쇄신안을 전당적인 실천 지침화하여 실질적으로 당을 쇄신시키고, 도약시킬 수 있는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함.
- ‘10만 당원확대’ 라는 목표에 맞게 전당적인 당원조직사업이 전개되지 못함.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당의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전략전술층을 분명히 하여 사업하는 등 당원확대를 위한 이슈화, 기획화가 부재했고, 지역정치활동에서의 사업화와 전당원의 조직사업 등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당원확대 및 당원관리 사업, 간부육성 사업 등 당원사업에 대한 목표와 그에 따른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전당원 지침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진보진영의 단일연합 조직 건설에 대해 당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풍부히 토론하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진보진영 조직건설과 조직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업을 전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소수자 의제와 관련하여 정책.인력.예산을 투여하여 담당부서만의 사업이 아닌 전당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보의제에 대한 사업에 역량을 기울여야 함.
- 또한, 2005년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수자 부문 할당 문제와 관련하여 전 당원의 지혜를 모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음.

3) 10.26 재보선 평가

- 10.26 재보선은 당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중대한 선거였음
- 당은 총력을 기울여 선거를 지원했으나 패배함, 이로 인해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됨
- 울산 북구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원내 10석이 무너지고 독자 입법발의가 불가능해지는 것과 함께, 당의 정치적 위상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 북구 선거 패배와 전체적으로 저조한 득표는 원내 진입 이후 당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요구하는 것임
- 당의 조직기반이 상대적으로 가장 튼튼한 울산에서 패배한 것은 울산지역의 당 사업이 당의 조직적 기반을 확대 강화하고, 진보정당 다운 새로운 상을 대중속에서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울산 북구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를 민주노동당이 장악하여 정치와 행정 전반을 당이 책임지고 있고,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객관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임에도 패배한 것은 당의 정치활동, 지역사업, 행정, 노동조합과 당의 지역사업 결합 방식 등, 전반적인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과제로 남기는 것임
-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방향 문제,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 정규직 노동조합과 당과의 발전적 관계,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 진보정당 다운 방식, 등 깊이 연구,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음

5. 200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당적인 선거준비

1. 2006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전당적인 체제 구축과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조직과 지역정치활동을

1) 성과

- 2005년 6월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하고 시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주요부서, 민주노총, 전농이 참가하는 2006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선거 준비태세를 갖추.
- 2006위원회는 ‘2006년 선거방침’을 결정하여 중앙위에 제출하여 7월 2일 중앙위에서 선거기본방침을 결정함.
- 2006위원회는 여성후보 20% 강제할당, 후보검증위원회 활동, 지방공직자 유급화 방안 토론하고 결정하여 진보정당 성격에 걸맞는 방안을 수립함.
- 이와 함께 유관부서들이 중심이 되어 시도당별 예비 후보자 연수 등을 통해 예비 후보 및 운동원 교육을 실시하여 선거준비에 기여함.

2) 한계 및 과제

- 2006년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무상의료 사업이 중앙 및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함으로 인해 무상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사업, 대중사업을 통해 선거준비를 한다는 기본구상이 차질을 빚음.
-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통사업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함.
- 지방선거의 핵심의제 정책공약 준비와 관련해서도 지방선거에 구체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일반적 수준으로 제출되어 지방선거 준비에 구체적 도움이 되지 못함.

- 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로 개정되고 당이 유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후 거대정당에 의한 게리먼더링을 저지하지 못함,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당이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나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당의 대처가 완강하고 결사적으로 전개되지 못함
- 현재 선거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건에서 다양한 원내외의 협상과 투쟁을 통해 이를 쟁점화하고, 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6. 생태환경의 파괴 저지 및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

1.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2. 2006년 지자체 선거 준비를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마련한다.
3.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하여 에너지.교통.농업 부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4. 당내 녹색정치 토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 성과

- 방폐장, 천성산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대응함.
- 연수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국 광역도시에 ‘태양의 도시’ 조례 확산, 에너지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태양의 나라’ 프로젝트를 진행함. 지역환경정책 개발을 위한 순회 간담회 진행.
- 환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녹색사회포럼’ ‘2기 녹색정치학교’ 등을 진행함.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평화 . 생명 등 당 내외 녹색정치 담론 형성과 그 실천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음. 또한, 환경위원회, 분회, 지역위원회, 지방의회 등의 녹색정치 사례 공유를 통해 당원들의 생활 속 녹색정치 사업전형의 단초를 마련함.

2) 한계 및 과제

- 7대 사업목표로 수립하였으나 전당적 실천전략으로 세부화되지 못하였고, 환경위원회 사업으로만 진행됨. 인력 . 예산 . 정책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함.
- 환경현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중저준위 방폐장 저지 투쟁에 대해 중앙차원의 기획과 인력 및 예산 배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역의 각개전투로 진행되었음. 결국, 탈핵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됨.
- 방폐장, 천성산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환경현안에 대한 논리와 대안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전당적으로 집중하여 조직사업, 대중투쟁을 전개하지 못함.
- ‘태양의 도시’ 조례 확산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했고,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해 추진해야 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개발하지 못함.

7.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사업

1.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2. 생산된 성인지적 정책을 당원 교육과 토론을 거쳐 당원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3. 여성활동 강화사업을 통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여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1) 성과

-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005년 민주노동당 여성국감에서 각 분야별 정부의 여성 빈곤과 관련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함. 주요 의제로 △농업인력육성사업 평가(강기갑 의원) △새터민 지원사업 평가(권영길 의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평가(최순영 의원) △특수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평가(천영세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정책위원회·현애자 의원실) △여성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단병호 의원실)를 다루었고, 국정감사 시 질의와 함께 [여성빈곤해소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 생산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빈곤 관련 정책의 성별 수혜도 제고를 촉구함.
- 2005년부터 실시되는 41개 중앙행정기관 성별 영향평가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우수기관-하위기관을 선정 . 발표하고,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성별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낮은 인식을 비판하고, 5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음.
-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당원 교육을 올해 성평등 교육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시도당 강사단 교육을 실시하고, 각 광역 시.도당, 지역위원회에서 성인지적 관점 교육을 진행함.
-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성인지적 지역정책.공약 개발’ 을 위한 교육을 광역 시.도당 선거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각 지역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사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여성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여 당내제도 개선, 교육사업, 여성후보 발굴 사업 등을 진행함. 또한,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당규 신설, ‘2006년 지방선거 지역구 선출직 20% 여성할당 방침’ 등의 결정을 통해 여성당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킴.

- 처음으로 ‘지역공모 사업방식’ (여성빈곤, 여성비정규직, 방과후 교육 지정공모 포함)을 통해 지역 여성정치활동이 강화되었으며,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에도 기여함.
- 중앙당 차원의 여성지도자학교, 놀이문화학교, 여성정치학교, 지방선거후보학교와 16개 광역 시·도당에서 진행한 여성정치학교, 여성농민당원학교, 민주노총 여성간부 수련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성당원의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을 진행함. 3차례에 걸친 당 성평등강사단 연수를 통해 자체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여성간부, 정치인 양성을 도모함. 또한, 당 여성인적 토대마련을 위해 1000인 진보여성 बैं크를 구축함.
- 지방선거에 대한 여성당원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지역 지원사업 등이 강화됨.

2) 한계 및 과제

- 당에서 생산하는 정책을 사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의제를 정책화하는데 미흡했음. 이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정책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의 성인지적 의정활동 및 지역정치활동 프로그램 제안과 사례점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함.
-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실제 각 당부에서 정책, 사업, 운영, 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당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선거에 여성후보를 지원하고, 승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일원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모색되어 져야 함. 또한, 지역공모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되, 대규모 여성프로젝트를 굵직하게 집행하여 정책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됨.

8.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평가

- 10.26 재보선의 패배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11월 5일 5기 6차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6년 1월 20일 1차 당직선거가 진행됨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됨.
-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상사업, 당면투쟁 사업, 지방선거 준비, 당 쇄신방안 마련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함.
-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지역순회,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혁신포럼 등을 통해 당 쇄신에 대한 당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당적 토론안으로 ‘쇄신안’을 제출함으로써 당 쇄신에 대한 당 안팎의 의지를 이끌어 냄.
- 쌀 비준 저지투쟁,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실현 투쟁 등 당면 투쟁에 힘을 기울여 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남김.

9. 전당적 중점 사업(무상으로 무상교육 부유세 운동본부) 평가

1) 중점사업 설정의 배경

① 민생관련 중점사업의 필요성

- 당은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및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였음, 그러나 대중들은 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임.
- 원내 진출 2년차를 맞은 당은 폭로와 선전 중심의 ‘담론 투쟁’을 넘어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을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경험)시켜 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당은 대중의 구체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보수양당 역시 2005년 ‘민생’을 화두로 삼고 있음. 그러나 보수양당의 ‘민생’은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이며, 이는 재벌과 기득권층을 1차적 수혜 대상으로 한 것임. 민주노동당의 민생의제는 보수양당의 민생과 차별화된 ‘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고통을 해결하는’ 의제 ‘가 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전당적 실천을 벌이는 것을 통해 당의 일치성과 단결을 강화하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대중사업이 가능한 의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선거 준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자는 것임

② 무상의료 정책의 실천적 의미

- 무상의료가 갖는 보편성과 공공성

교육, 주거, 조세 등과 의료 역시 전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 또한 의료문제는 아직까지 시장(자유경쟁)의 영역보다, 공공영역에 강조점이 있음.

- 무상의료의 절실함과 대중 설득(동의)력

큰 병이 걸리면 집안이 망하는 사회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이 우리사회에 존재함

- 무상의료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성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65세(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2종)와 차상위 계층 10% 등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의료(또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는 문제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당의 정신과 건전한 상식에 부합함.

- 무상의료' 가 갖는 계급성

병 발병률 및 치사율, 보험료 제도에 있어 빈곤의 악순환과 빈부격차가 심각함. 빈곤층은 암 발생률에 있어 남 1.65배, 여 1.43배이고 암에 의한 사망률은 2.06배나 높음.

- 무상의료' 를 통한 건강권 추구와 평화주의 연계

당은 04년 총선에서 4년간 신무기 도입 예산 42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 확충에 사용하자 제안한 바 있음. 신무기 도입 예산의 50%(연 5조원)만 가지고도 무상의료(연 4조~6조원)의 전면적 실시가 가능함.

- 무상의료의 지역사업과 결합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선전전 및 캠페인(서명전)을 주요 거점과 타겟층에 집중할 경우 당의 조직적 성과로 남길 수 있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1차 타겟층)인 의료인-환자-가족이 모여 있는 (종합)병원과 함께 노인정, 영유아이 시설이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음.

한편 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과 '지역중심공공병원'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 또는 지역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

③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

- 무상교육, 부유세는 무상의료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정책공약이며, 교육문제, 세제개혁은 그 자체로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심과제이며, 특정한 이슈만으로 전당사업을 전개할 경우 제한성이 있는 것이므로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 운동을 무상의료와 함께 전개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운동본부’ 를 설치하고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임

2) 전개 과정 및 성과

- 중앙당에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토론회, 캠페인, 서명운동, 집회, 입법발의 등을 전개함

- 민주노총, 전농과 공동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동투쟁본부’ 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운동 진영 전체가 결집하여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를 결성하는 성과를 남김(국민연대에는 참관 및 공동사업 전개)

- 무상의료 사업을 전당적 중점사업으로 전개함으로써 무상의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고, 당이 주장한 상당한 내용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성과를 남김.

- 지역에서도 서명운동, 캠페인,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운동을 등을 통해 무상의료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됨.

- 무상의료 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포함 성과임.

- 무상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상교육 로드맵이 완성단계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중앙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전개됨

- 부유세 실현관련 사업도 부유세 실현과 관련한 세부적 정책수립 미비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됨

3) 한계 및 오류

- 전당적 중점사업으로 설정했던 무상의료 사업은 사업초기 ‘암부터 무상의료’ 라는 대중적 구호를 제기할 것인가? ‘암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중심적 요구로 제출하고 입법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가난한 사람부터 무상의료’ 를 기본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쟁이 상당한 기간 진행되며 초기 중요

한 시기에 당 사업의 주도성이 상실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등 대중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실성있는 사안을 중심요구로 제기할 경우 사업에서 당 주도성 상실이라는 우려로 인해 소극적이거나,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대중적 이슈, 현실성 있는 사안으로부터 당이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애초의 방향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무상교육, 부유세가 결합되면서 사업의 중심성을 상실하고 복잡하게 됨, 즉 사업목표의 집중성에 혼선이 발생하게 됨.

- 중점사업 영역을 설정했지만 중점사업을 사회적 이슈화하고, 쟁점화 해 나가기 위한 기획사업, 언론사업 등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와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정책적 준비와 대중접근성이 원활하다는 판단에서 중점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서, 학교급식과 같은 이슈의 폭발성이 떨어지고, 무상의료의 지역사업 의제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역에서 힘있는 대중운동이 전개되지 못함.

- 비정규투쟁, 농민 투쟁 등과 달리 사업 및 대중운동의 주체 및 동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객관적인 한계와 사업전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함.

- 조직태세에 있어서도 최고위원 3명, 의원단 3명 등 6명의 공동본부장을 두는 등 영역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방만한 조직구조를 됨으로써 사업의 집중성과 원활한 집행에 장애를 초래함. 이와 함께 인력, 재정 지원등 전당적 사업에 걸맞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음.

-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 당 주요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의 역량, 객관적 조건, 대중의 인식과 의식수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당의 구상과 정책적 방향을 실현하는 것을 중심에 두게 됨으로써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향후 당의 중요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의정활동 평가

1. 주요 현안 활동 평가

1) 성과

- 쌀 협상 및 비준안 반대 투쟁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에 있어 의원단 전체가 집중해 국회 내 쟁점을 선도하고, 대중적 투쟁 이슈를 형성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남겼음.
- X파일 명단 공개, 삼성 관련 변칙 상속과 분식회계 등 특권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성공함.
- 정부 여당의 세계 및 부동산, 신용불량자 등 정책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편 전기-수도 등 에너지 기본권 이슈화, 고액 중증 질환자 의료비 경감 등의 정책적 성과를 남김.
- 과거사법 재개정 추진, 파병 반대, 황우석 사태 등 진보정당에 걸맞는 당의 독자적 입장을 견지했음.

2) 한계 및 과제

-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 진보적 정책의제는 입법발의 이후, 원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그침.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함.
- 학교급식법,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004년 입법발의한 민생관련한 법안의 쟁점화나 법안의 처리에 있어 진전이 없었음.

2. 정책 및 입법 활동 평가

1) 성과

-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보건법 개정 : 개방형 이사제 비율 등 부분적인 후퇴가 있었으나 개방형 감사제 도입, 사학법인 설립시 자산이전 보고 의무화, 임시이사 임기 제한 삭제, 퇴직 교육공무원 사학취임 제한, 교원 징계 조항 중 노동운동 관련조항 삭제, 이사회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 민주

노동당 개정안이 상당수 반영되어 현행보다 개선된 규정이 포함됨.

- 무상의료, 무상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그에 따른 1단계 법안을 발의하였음. 보건복지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비급여(상급병실료, 식대, 선택진료비 등)의 급여 전환 폭 확대, 아동 본인부담 면제 정책 등을 이끌어 냄. 제주도 특별법 대응으로 영리법인 저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성과를 가져옴.
-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와 뇌물과세 도입,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과 증세론 구체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제한 및 주택공개념 정책을 종합하여 입법발의, X파일로 불거진 삼성공화국 문제에 대한 대응, 파산관련법안 69개 제출, 농업희생을 위한 7대 법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출함.

2) 한계 및 과제

- 무상의료와 관련하여 입법성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전술과 이슈 개발 부족, 보장성 확대 측면에 성과 있으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무상의료의 토대를 형성하는 과제 미흡.
- 당과 의원단 차원의 ‘빈부격차 해소’ 등 민생관련 종합적인 청사진, 총론적 접근이 필요함.
- 긴급지원법 제정, 희망한국 21 등 참여정부가 쏟아내는 복지정책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차별적인 의제를 찾지 못하고 비판테제로 머무름. 사회복지 의제에 좀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 빈곤대책과 지역 복지 의제 등에 대해 연구 필요.

3. 원내 정치활동 평가

1) 성과

- 5당 원내대표회담과 정책협의회, 정당대표 연설 등 양당교섭단체의 독점적 국회운영을 넘어 의석수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
- 열린우리당,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립학교법 처리와 함께 선거구 분할에 대응해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고, 야 4당 공조를 통해 쌀 협상 국정조사 실시,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검 관철, X파일 특

검법 등을 발의함.

- 6월 국방장관해임안과 12월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이끌어 냄.
-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원내 공감대 확보

2) 한계 및 과제

-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민주당의 의원 영입으로 원내 4당으로 정치적 위상 약화됨.
- 5당 원내대표회담과 정책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주력 의제를 원내 의제화시켜내는 다양한 협상 전술의 고민이 필요함.

4. 운영 및 조직활동 평가

1) 성과

- 당과의 관계에 있어, 원내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가 월 1회 개최되고, 원내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의원단에 위임되는 방식이 정착됨.
- 대표단을 중심으로 원내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총의 안정적 운영, 매 임시회 전에 의원 워크숍 정례화를 이룸.
- 쌀 투쟁을 통해 당에 대한 농민 5단체와 농민층의 지지를 확대시키는 성과를 냄.
- 4.30, 10.26 재선거 지원, 무상의료 전국 캠페인, 빈곤층 현장방문 등 기획사업에 따른 의원단 차원의 집중적 원외활동과 의원실별 강연회 등 대중사업을 전개함.

2) 한계 및 과제

-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실무적 점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원내

외를 포괄하는 전략적 기획사업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와 방향을 통일시켜내는 과제가 제기됨.

-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간의 소통과 의원단의 당 사업에 대한 결합력을 높여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당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 필요
- . 고금리제한법, 재외동포법 등 의원실과 정책위원회 간 정책생산과 조정 과정에서 방식과 속도의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음.
- . 의원단 차원의 정책의총 활성화, 의원단 초청 월례포럼의 정례화 필요
- . 의원단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치적, 정책적 네트워킹의 과제가 제기됨.

■ <참고> 2005년 법안 및 결의안 발의

1. 법안발의 (법안 73개, 파산관련 법안 69개 발의)

- 방사선편폐기물관리법 제정안 : 조승수 의원 등 27인
- 파산법 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0인
- 최저임금법 개정안 : 단병호 의원 등 10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단병호 의원 등 12인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등 12인
- 삼성 에스디아이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및 해고자등에 대한 휴대폰 불법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의혹사건 및 이와관련한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방해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0인
- 농지법 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4인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4인
-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0인
- 에너지기본법안 제정안 : 조승수 의원 등 10인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0인
- 사면법 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0인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범죄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 조승수 의원 등 15인
-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 : 조승수 의원 등 16인
- 국회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 : 이영순 의원 등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61인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안 : 이영순 의원 등 26인
- 최저임금법 개정안 : 단병호 의원 등 10인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및지원등을위한 특별법제정안 : 조승수 의원 등 23인
- 국가안전기획부및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 천영세 의원 등 10인
- 소득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국세기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의료급여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3인

- 의료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3인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4인
- 지역보건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4인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3인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5인
- 모자보건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5인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3인
- 근로기준법 개정안 : 단병호 의원 등 10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37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69개 : 당 의원 10인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4인
- 철도사업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7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2인
-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45인
- 지방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소득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11인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국회사무청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국회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3인
-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 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2인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3인
-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3인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3인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 강기갑 의원 등 12인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등 10인
- 소득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1인
- 법인세법 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 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10인

- 지방세법 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10인
- 보훈기금법 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10인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심상정 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최순영 의원 등 10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현애자 의원 등 10인
- 저작권 관련 법안 발의 : 천영세 의원 등 10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단병호 의원 등 15인
- 방송법 개정안 : 천영세 의원 등 14인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 권영길 의원 등 31인
- 주민투표법 개정안 : 이영순 의원 등 14인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노회찬 의원 등 169인
- 국가안전기획부및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 야 4당 공동발의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2. 결의안, 동의안 등 발의 (결의안 10개 제출)

- 지울스님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촉구 결의안 : 조승수 의원 등 91인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 : 권영길 의원 등 20인
-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 천영세 의원 등 10인
- 독도의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지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 : 천영세 의원 등 10인
-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 결의안 : 단병호 의원 등 23인
- 이라크파견국군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
- 서울대학교설치령 폐지 촉구 결의안 : 최순영 의원 등 12인
- 국무위원(행자부장관 허성관) 파면권고 결의안 : 천영세 의원 등 10인
- 쌀관세화 유예연장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 : 강기갑 의원 등 76인
- 고전용철농민사망사건과 11월 15일 여의도농민대회에 대한 경찰폭력진압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강기갑 의원 등 23인

■ 주문 사항

1. 제출된 2005년 결산 및 감사보고를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결산보고서

※ 이 결산 보고서는 2006년 1차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며, 감사의견서의 경우 추후 공지할 예정.

1. 2005년 수입.지출 명세서

1) 2005년 수입명세서

관	항	목	2005년예산	수입	%
전월이월금	전월이월금	전월이월금	118,963	118,963	
당비	일반당비	일반당비	5,840,710,000	5,418,515,701	92.77%
	특별당비	선거특별당비			
		공직특별당비	1,822,059,331	1,798,294,453	98.70%
		특별당비		23,301,520	
평생당비	평생당비		98,000,000		
기탁금	기탁금	기탁금	8,030,000	19,352,050	241.00%
보조금	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	2,274,800,000	2,036,462,050	89.52%
후원회기부금	후원회기부금	후원회기부금	1,756,670,000	3,710,604,570	211.23%
차입금	차입금	단기차입금	158,260,800	607,338,250	383.76%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67,773,1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161,586	
	판매수입	판매수입	100,000,000	1,140,000	1.14%
	회비수입	회비수입		19,515,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240,106,572	80,967,549	33.72%
수입계			12,200,755,666	13,881,544,792	113.78%

나. 2005년 지출명세서

관	항	목	2005년예산	지출	%
기본경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108,665,100	120,774,750	111.14%
		자원활동비	18,000,000		
		급여	2,181,450,000	2,039,407,435	93.49%
	비품및소모품비	소모품비	60,624,000	60,312,400	99.49%
		수선비	6,000,000	1,784,500	29.74%
		비품구입비	24,111,000	6,750,550	28.00%
	사무소설치운영비	임차료	467,000,000	468,279,248	100.27%
		차량유지비	8,900,000	7,730,769	86.86%
		공사비	3,000,000	230,000	7.67%
		관리유지비	10,476,000	11,082,000	105.78%
	공공요금	우편운송료	12,600,000	4,572,120	36.29%
		수수료	16,800,000	14,854,280	88.42%
		통신요금	75,540,000	74,267,980	98.32%
		신문도서비	10,875,000	12,789,000	117.60%
		제세공과금	7,000,000	9,848,850	140.70%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자료구입비	10,982,000	7,058,400
연구소지원금			627,219,000	610,938,620	97.40%
정책개발비			25,255,000	24,231,970	95.95%
정책회의비			40,510,000	19,928,810	49.19%
자료제작비			26,150,000	4,354,600	16.65%
기획사업비			95,970,000	54,189,090	56.46%
교육훈련비		자료제작비	10,800,000	7,057,656	65.35%
		당원관리비	99,000,000	134,036,200	135.39%
		교육진행비	47,510,000	35,309,570	74.32%
		기획사업비	45,327,000	46,379,040	102.32%
조직활동비		회의비	126,020,000	124,278,994	98.62%
		출장비	59,269,500	63,482,334	107.11%
		조직사업비	861,192,143	744,795,473	86.48%
		당내선거비	14,400,000	8,428,000	58.53%
		투쟁사업비	8,860,000	6,875,710	77.60%
	의정사업비	74,000,000	21,500,000	29.05%	
	업무지도비	224,600,000	220,764,981	98.29%	
연대사업비	30,560,000	27,853,040	91.14%		

	선전비	광고비				
		홍보비	227,950,000	141,248,345	61.96%	
	선거비	공직선거비				
		선거지원금		21,182,040		
	기타비용	부채상환	683,070,826	191,137,602	27.98%	
		기타경비		526,401,552		
	지원금	시도당지원금	4,784,711,857	5,427,306,380	113.43%	
		국회입법활동비	276,000,000	266,100,000	96.41%	
	여성사업비	당원교육훈련비	110,750,000	88,076,500	79.53%	
		정책개발비	28,100,000	6,266,900	22.30%	
		기본경비	30,000,000	34,252,900	114.18%	
		조직활동비	34,450,000	26,211,200	76.08%	
		선전비	8,673,000	4,692,238	54.1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78,384,240	66,062,920	84.28%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500,000,000	0	
지출계			12,200,755,666	11,793,084,947	96.66%	
잔액				2,088,459,845		

2. 2005년 총수입과 총지출 해설

1) 총수입

○ 2005년 총수입 : 13,881,544,792원 (총예산 12,200,755,666원)

◦ 일반당비 : 5,418,515,701원으로 예산 대비 92.77% (총예산 5,840,710,000원)

◦ 공직특별당비 : 1,798,294,453원으로 예산대비 98.70%(총예산 1,822,059,331원)

◦ 후원회 기부금 : 3,710,604,570원으로 예산대비 241.00%(총예산 1,756,670,000원)

후원회 기부금이 예산대비 241%인 이유는 민주노총 연맹별 세액공제 모금액을 중앙당으로 취합했기 때문임. 중앙당으로 취합된 세액공제 모금 총액은 26억 5천만원임

26억 5천만원 중 1,822,692,000원은 시도당에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827,308,000원임.

◦ 3,710,604,570원중 981,604,570원은 당우, 후원회원 등이 낸 기부금임. 나머지는 본격적인 세액공제 사업 이전(2005년 1월, 7월)에 모금된 후원금임.

◦ 차입금은 1월에 차입하여 3월에 갚았던 1억5천, 이후 차입했던 4억 5천만원 등이 포함된 것임

○ 항목 설명

- 기탁금: 선관위 기탁금 19,352,050원
- 지원금 : 시도당지원금 반환금(30퍼센트)
- 회비수입 : 청소년위원회 수련회비
- 기타수입 : 조선사회민주당 초청 당대표단 평양방문비용(통일부), 당대표방북단 선물비용(의원실), 카운티임대수입 등

2) 총지출

○ 2005년 총지출은 11,793,084,947원 (총예산 12,200,755,666원)

연간 예산 대비 지출율은 96.66%

◦ 제세공과금

2005년 지출은 9,848,850원으로 년 대비 지출율 140.70%.

초과된 이유는 2005년 제세공과금 예산은 7,000,000원인데 자동차세금 등 각종 세금, 각종 과태료, 변호사 비용 등을 제세공과금에서 지출때문임.

◦ 출장비

2005년 지출은 63,707,034원으로 년 대비 지출 107.49%.

관항목 분류 오류를 수정한 결과 3/4분기 자료와 지출 금액과 지출율에 차이가 있음.

◦ 부채상환

2005년 부채상환액은 191,137,602원, 년 대비 27.98%이나 연수원임대료 8,000,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환한 것임. 이것은 2004년 발생 부채를 잘못 상정하여 예산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내역은 대선채권 상환금, 2004년 당내 선거인증서비스이용료, 당원여론 조사자료집, 총과업특보, 총력투쟁당보, 카운티할부금 등임.

◦ 투쟁사업비

지출은 6,875,710원임. 년 대비 77.60%

관항목 분류 오류를 수정한 결과 3/4분기 자료와 지출 금액 지출율에 차이가 있음.

◦ 예비비

지출은 66,062,920원임.

내역은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관련 지출, 무상 의료 관련 홍보비, 지역환경 정책개발순회간담회 등임.

◦ 기타경비

지출은 526,401,552원임. 내역은 2005년 차입한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 지출, 그리고 모금한 투쟁기금(기타수입)의 지출 등임.

◦ 잔액

잔액은 2,088,459,845원 중 3800만원을 제외하고는 세액공제 후원금으로 모아진 기금임. 이중 1,822,692,000원은 시도당으로 보낼 것임(2:8 배분비율에 근거함).

■ 채무명세서 보고

채무명	거래처	기초잔액	당기상환(회수)	당기발생	기말잔액
미지급금	사람생각	5,456,000	5,456,000	828,000	828,000
미지급금	화수분	14,341,800	14,718,000	28,490,000	28,490,000
미지급금	환영인쇄	11,167,200	11,167,200	27,168,050	27,168,050
미지급금	아티베티류	500,000	500,000	-	-
미지급금	한양건설-임대료	38,500,000	38,405,982	38,481,300	38,481,300
미지급금	공공요금(전화)	9,353,626	9,353,626	5,345,730	5,345,730
미지급금	이엔터프라이즈	3,000,000	3,000,000	-	-
미지급금	홈페이지운영디카구입	2,300,000	2,300,000		-
미지급금	조세개혁자료집-삼일포장	5,000,000	561,620		-
미지급금	연례정책연구보고서제작-화수분	6,526,200	3,972,100		-
미지급금	정무직, 실장당	23,680,000	18,000,000		-
미지급금	여론조사비	10,000,000	8,068,500		-
미지급금	16대 대선시기 국민채권	65,200,000	48,400,000		-
미지급금	카운티할부금	9,526,000	7,644,260		-
미지급금	연수원임대료	8,000,000	-		8,000,000
미지급금	뜰에가득Flower	-	-	900,000	900,000
미지급금	한국씨티에스	-	-	3,531,770	3,531,770
미지급금	4대보험	-	-	8,000,000	8,000,000
미지급금	기타사업비 부채	19,899,240	19,899,240	70,470,130	70,470,130
미지급금	차입금		457,338,250	607,338,250	150,000,000
미지급금	급여-8월분 50%(중앙당)			59,706,700	59,706,700
미지급금	급여-8월분 평균30만원(지역)			42,310,200	42,310,200
미지급금	급여-12월분(김원정)			1,360,000	1,360,000
미지급금	정무직 업무활동비			10,150,000	10,150,000
		232,450,066	648,784,778	892,570,130	454,741,880

□ 2006년 1월 20일 현재

◦ 2005년에 이월될 부채를 2006년 1월에 상환하였음. 이월된 총부채액 454,741,880원중 348,327,870원을 상환하여 2006년 1월 20일 현재 남은 부채액은 106,414,010원임. 현재 계속 부채를 갚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 구성이전에 2005년에 발생한 부채는 거의 갚게 됨.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날짜	내역	금액
01월 13일	동남아시아지진해일피해성금	500,000
01월 21일	초록의공명씨디구입	1,000,000
03월 02일	조선사회민주당대표단상봉경비-조직활동비 공동사업비	300,000
03월 18일	독도 시찰 및 경비대 격려 방문	3,350,000
03월 22일	조선사회민주당대표 상봉 추진위 사업(3/2에 이체증 있음)정현곤	1,950,000
03월 24일	국회의원 선거지원금정형주	5,000,000
03월 24일	선거 파견-최기영	470,000
03월 24일	선거 파견-김배곤	470,000
04월 06일	독도시찰 및 경비대 격려 방문 사업비반환	-346,000
04월 13일	아산 국회의원 재보선아산김영환	5,000,000
04월 13일	인천광역시의원 선거 지원인천이진희	1,000,000
04월 13일	기초의원 선거 지원시흥갑-허동일	500,000
04월 13일	기초의원 선거 지원창원-이재용	500,000
04월 13일	기초의원 선거 지원성동구-박영천	500,000
0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지원금공주-유근복	5,000,000
04월 13일	기초의원 선거 지원거제-이상문	500,000
04월 14일	기초의원 선거 지원수원장안-임은지	500,000
04월 19일	성남중원 선거지원금정형주	10,000,000
04월 25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한 2차 금강산실무회담	2,650,000
04월 25일	4월 12일 4.30보궐선거 기자회견 현수막	90,000
04월 27일	최고위원회와 당 출입기자와의 식대 및 주류비	497,000
05월 09일	추모연대<열사수첩, 열사력> 재정사업 정산장현일	295,000
05월 25일	지역환경정책개발순회간담회(5/25 대전)	138,000
06월 13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80,000
06월 13일	팸플렛제작(회장순론회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사업 교양, 홍보)	1,306,800

06월 13일	대자보제작(분회장순론회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사업 교양, 홍보)	30,000
06월 14일	지역환경정책개발순회간담회(5/25기안서및 보고서)	223,200
06월 23일	보안검색 대금(2004년 대금누락건)	1,491,600
06월 30일	사업비반환(4/25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위한 2차 금강산실무 회담)	-280,260
07월 06일	지역환경정책개발순회간담회(5/25기안서및 보고서)	202,580
07월 07일	반환금(4/13기초의원 선거 지원창원-이재용)창원-이재용	-500,000
07월 14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비디오테이프제작 200개장희수	330,000
07월 14일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운동본부-시도당발송택배비 등	114,000
07월 29일	4.30선거지원금 반환시흥갑 허동일	-500,000
08월 01일	4.30기초의원 선거 지원(수원장안) 반환수원장안-임은지	-500,000
08월 01일	7/26,8/3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기자회	60,000
08월 02일	4.30국회의원 선거지원금-정형주성남중원-정형주	-5,000,000
08월 11일	제1차 무상의료무상교육의날 캠페인-각종선전판, 피켓제작, 기타선전 물제작	81,750
08월 11일	제1차 무상의료무상교육의날 캠페인-현수막, 어깨띠	198,000
08월 22일	선거지원금 반환정형주(지학규)	-10,000,000
09월 13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현판전진형 -현판	90,000
09월 13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가수섭외하 장호-가수섭외	200,000
09월 13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탈제작한유 진-탈제작	100,000
09월 13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5,11일 현 수막	60,000
09월 13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특보제작	1,000,000
09월 27일	무상의료차량 홍보단용 차량스티커 제작	2,135,380
09월 28일	삼성불법정치자금관련 8/11검찰청,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현수 막	60,000
09월 28일	무상의료5종포스터제작	1,320,000
10월 04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등 특위사업-현수막, 퀵서비스(10/4)	40,000

10월 04일	조승수의원 특보 2회	1,320,000
10월 05일	추석민심탐방활동일환 장기투쟁사업장 방문 9/15	170,000
10월 05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2,000,000
10월 06일	무상의료,교육의날, 법률안제출기자회견,서울대3불법제화대응투쟁- 현수막	121,000
10월 06일	무상의료,교육의날, 법률안제출기자회견,서울대3불법제화대응투쟁- 운송비	31,000
10월 06일	무상의료법률안공청회 언론 홍보	200,000
10월 10일	대구동구을 선거지원금(최근돈후보)대구동구	5,000,000
10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선거비지원금(최종원후보)경기도광주	5,000,000
10월 10일	10.26재보궐선거 로고성 제작-진행비	100,000
10월 10일	10.26재보궐선거 로고성 제작-저작권료안석희	300,000
10월 10일	10.26재보궐선거 로고성 제작-녹음실비, 프로듀서비이원경	250,000
10월 11일	경기부천 원미을 선거비지원금(이근선후보)경기부천원미을	5,000,000
10월 17일	10.26재보선 선거지원	1,946,000
10월 18일	10.26 재보선 선거지원정갑득	5,000,000
10월 21일	2005년 2기 녹색정치학교-행사준비금, 답사비	300,000
10월 22일	반핵국민행동 전국대표자-집행위 전략회의(9/13)	88,400
10월 22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등 특위사업 (4)-9/12검찰청 기자회견 플랑,특송 비	45,000
10월 22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등 특위사업 (4)-9/13검찰청 기자회견 플랑	30,000
10월 24일	조승수의원판결 관련 기자회견(9/30)	30,000
11월 02일	삼성불법정치자금,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9/22)-운반교 통비	8,500
11월 02일	삼성불법정치자금,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9/22)-당거리 연설편	30,000
11월 04일	무상의료 서명운동 엔트음향, 노가바녹음 및 제작-녹음기술,녹음실 사용 등이원경	700,000
11월 04일	무상의료 서명운동 엔트음향, 노가바녹음 및 제작-진행비 등	100,000
11월 15일	검찰 공안부 해체 기자회견 10/19	30,000
11월 15일	울산 재보궐 선거지원 10/24	50,000

11월 17일	무상의료 관련 당특보 제작 10/26	2,476,000
11월 25일	사업비정산(10/21-2005 2기 녹색정치학교-뒤풀이비)	288,000
11월 28일	사업비정산(11/15 울산재보선 선거지원-이소선)	367,550
11월 30일	소수자들의 저널 및 출판사 일다 후원일다	50,000
12월 09일	사업비정산(9/13 삼성불법정치자금, 안기부 불법도청특별대책위-특 보)	329,000
12월 14일	sbs사랑의 열매 후원금-대표 참가	1,000,000
12월 21일	국정감사보고대회 및 2차 총회-자료집	209,000
12월 21일	국정감사보고대회 및 2차 총회-현수막	30,000
12월 21일	국정감사보고대회 및 2차 총회	30,000
12월 21일	여성 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발족기금 지원박영신	230,000
12월 23일	sbs폭설피해 후원금-문성현집행위원장 참가	500,000
12월 26일	삼성불법정치자금 등 특위사업 기안 7(11/16)	30,000
12월 26일	농성단지원(국회앞)-식대, 주유 등	116,940
12월 31일	단배식준비-현수막	60,000
12월 31일	단배식준비-기타물품	25,480
12월 31일	9월 30일 무상의료 자료집	264,000
합 계		66,062,920

■ 주문 사항

1. 제출된 2005년 사업평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2006년 정세전망

1. 동북아 정세전망

동북아 각 국가는 2006년 미국의 패권주의, 중국의 대국주의와 다자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1) 미국

- 중국부상 및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 수립 및 구체적 행동 가시화. 양안 문제의 적극 개입, 미일동맹의 강화, 잠재적 경쟁 능력 배제를 통한 포위 전략 추구, 대인도 우호 전략 가속화.
- 미일동맹 전략적 강화 방침 지속.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영국’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정치-군사적 지원, 비용 분담에서 역할 분담으로의 전환,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강화, 한미일 MD 협력 강화됨.
- ‘북한 위협론’을 통한 신동북아시아 패권 질서 구축. 6자회담 경색화 및 인권, 마약, 위폐, 대량 살상무기 등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통한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통한 신한미동맹 수립.
- 이라크 참전 문제 처리, 각종 자연재해 예상, 부시 행정부의 지지도 하락, 인종 및 국제적 인권 문제 제기, 각종 게이트 처리 등 국내 문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2) 중국

- 미일동맹의 양안문제에 대한 개입 움직임 견제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경쟁 가속화.
- 중화주의(中華主義) 강화 및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확보와 중화경제권 강화에 주력, 일본의 영향력 확대 및 군사 대국화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대만에 대한 강온전략, 인도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아세안국가연합과 연례 정상회담, 남미와의 관계 개선 등).

-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대화 중재 및 해결방안 모색, 6자회담과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당사국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통일 코리아가 미일 동맹에 편입되지 않게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력 결집. 올림픽 개최 이후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화를 발판으로 미국과 함께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 수립.

3) 일본

-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보통국가 진입 및 군사대국화 추구.
- 한미일 MD 구축 가속과 군비 증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및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군사 재무장 발판 마련, 주일미군 전력 및 기지 개편 작업 가속화.
- 정치의 우경화와 사회 전반의 보수화 심화.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지속과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군의 극우적 색채 심화, 역사 교과서 및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일본 외교 고립,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인한 갈등 증폭, 한일, 중일간 외교 갈등 악화 지속.
- 북일 수교 문제 해결의 가능성 약화.
- 가짜 유골 문제와 납북자 처리 문제로 공전 상황인 북일 수교 문제는 양국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현재 북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치 협상을 진행하기에 쉽지 않음. 그러나 2006년 임기 말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염두하고 있는 고이즈미 수상과 대미 관계 악화를 대일 관계 개선으로 뚫고자 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이익이 맞아떨어진다면 극적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음.

4) 러시아

- 러시아는 소련해체의 후유증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푸틴 집권 2기를 맞아 국내의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한 후 대내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자주외교 국익외교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계에 대한 미국의 현실적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연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분명하게 펼치고 있음. 즉 안보 이권의 수호와 함께 강국으로의 부활을 위해선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지만 이란, 중국, 인도, 북한 등지의 전략적 협력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과 이권 또한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구사함.
-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은 유럽지역에서는 EU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이익 보장 요구, NATO-러시아 위원회 활동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아시아지역 및 아프가니스탄, 체첸 지역 등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취하면서 결정적 힘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동북아에서 에너지자원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등을 수단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 중인 러시아는 6자 회담과 남북러 경제 협력 회의 같은 지역 다자대화 틀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북아·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계속 높여갈 것임.

5) 북한

- 북미 핵공방의 지속. 5차 6자회담의 경색화 이후 919 공동성명이 자칫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상존함. 그러나 양자 합의로 일방의 당사자가 쉽게 합의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북미기본합의서 보다는 다자가 보장한 6자회담의 내용 전반을 뒤집기에는 정치 외교적 부담이 존재함. 따라서 6자회담은 핵문제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처리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양자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 할 것으로 보임.
-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 이후의 경제 개혁 가속화 및 실리 외교 확대.
- 농업 문제 해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각 분야의 경제 개혁을 위한 경제 개선 조치 확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예상.
- 북미 북일 관계 악화 속에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필요 조치 확대.
-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및 경협 관련 회담의 정기화. 군장성급 회담 재개,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 활성화, 우리민족끼리의 날 기념 등.
- 후계자 문제와 제7차 당대회 개최 여부. 남측에서 예측되고 있는 후계자 내정설이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80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로동당 7차 당대회가 내년, 혹은 2007년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2. 남북관계 정세전망

- 남북관계는 2005년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평화체제 논의, 북핵문제 해결 등)를 위한 다양한 형식의 회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로 경색되어 있는 6자회담에서 기존의 한미공조 관계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며,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 또한 수동적 관리를 진행하며 북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 따라서 북 당국도 악화된 북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또는 또 다른 과제 도출을 위한 남북간 당국자 회담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임.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DJ 방북이 현재 논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 진척이라는 객관적 상황 변화 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쉽지 않음. 또한 회담의 장소와 형식을 가

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역시 회담의 성과물이 예상되지 않는 조건에서 쉽게 예단할 수 없음.

- 강화되고 있는 북중경제협력에 필적할 남북경협이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 보는 것 또한 2006년 남북관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임.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서 입주 기업들의 안착화가 이루어지고 2단계 부지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며 경협 회담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타결된다면 또 다른 실질적인 경제 협력 조치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6자회담의 장기간 공전 및 북미 관계 악화는 남북관계를 항상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올 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되어 파급 효과를 내며 각종 회담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특히나 비교적 안정화 되어 있는 장관급, 경협회담 외에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의 개최 및 정례화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 6자회담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미 보수화 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실제 위폐, 자산동결, 마약 등의 회담외적 요소들을 제기하고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상호 신뢰 조치를 통한 관계 정상화’라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택폭을 극도로 좁혀 놓은 결과를 가져옴.
-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중국과 한국 정부가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제안이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임. 따라서 현재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치적 타결 등이 예상됨.
-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동.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과제, 미군기지 활용 문제, 작전계획에 따른 한미 합동 훈련, 작전권 환수 및 주한미군 분담금 등 한미 사이 현안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미관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동이 연동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신한미동맹 강화라는 언술과 그에 따른 정치적 모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지 6자회담 문제나 남북경협 문제에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한미간 균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속적, 추종적 한미 동맹을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민간 통일운동이 작년 행사준비 위주의 협력체에서 2005년 12월 10일 남북해외 상설 민족통일기구(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를 합의하면서 안착화 될 것으로 보임. 특히 한반도 내에 상설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행사 위주의 형식에서 통일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동당은 작년 방북 사업의 한계와 성과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당 교류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새롭게 꾸려진 공동위원회에서의 활동도 관성적인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일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3. 한국정치 정세전망

1) 지방선거 관련

(1) 지방선거, 대선의 출발점

- 2006년 5월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단위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대선을 위한 당내경쟁이 본격화 될 것임. 동시에 대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당 내 파벌간 또는 정당간 정개개편 및 이합집산이 모색될 것이며, 헌법개정 논의도 이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후 2007년 12월 대선까지 18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240일 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헌론·선거제도 개편 등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가 진행될 것임.
-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이 많을 경우, 재·보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본격적인 대선게임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아니면 판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임.

(2) 지방선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듯

-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 심판’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의 경우는 특별한 전략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열린우리당의 의제에 반응하는 과정과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싸움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한 열린우리당이 선거 과정과 선거후에 어떠한 의제를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지점일 것으로 보임. 즉, 의제 설정에 따라서 확실한 패배를 패배가 아닌 패배로 만들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확실한 희생으로 만들거나, 승패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첫 번째 가능성은 지방선거를 탈정치화 시키는 것임. 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최소화 하고, CEO형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지방화’ 하는 것임. 한나라당의 정치인 또는 구 인사들에 대한 공천과 정치적 쟁점 형성에 대해, ‘탈정치-지역발전’으로 대응하는 것, 두 번째 가능성은 확실한 패배 전략으로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향후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임. 이와 병행하며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 의미있는 후보자들을 내세워, 탈 지역주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향후 선거를 위한 조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에서 선전할 경우 ‘패배의 (도덕적)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셋째, 지방선거의 완전한 중앙정치화와 동원극 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편이나 헌법 개정 등을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개혁이나 수구

나의 대립선을 형성하는 것임. 첫 번째의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 번째의 경우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임.

- 지방선거에서 각 당간의 연대의 틀이 가시화 될 수도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연합공천이나 결거 후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반한나라당 연대가 그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민주당 인사 및 기타 인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영입을 통해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닌 또 다른 연대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3) 소수정당의 가능성 타진 계기

-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민주당이 호남권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선전할 경우 열린우리당의 내부 분열까지도 짐쳐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경우는 지역정당으로 잔류하거나 열린우리당에 흡수통합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국민중심당의 경우 성장할만한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끊임없는 이합집산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2) 각 당 및 대선주자 전망

(1) 한나라당, 지방선거 이후 내분 격화 가능성

-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이냐 아니면 신진 인사의 등용이냐를 둘러싸고 수도권 소장파와 영남 중진인사들 사이에서, 또는 당내 계파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에 잠재화될 것임.
- 지방선거에서 예상과 같이 선전할 경우 당의 내분은 잠재화 될 것이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 내지 못할 경우 공천과정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소장파와 영남 중진간, 대선 주자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 이 경우 박근혜 대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박근혜 대표는 무난히 대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임.
-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향후 국면을 반전시킬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임. 박근혜 대표의 경우도 6월 당권과 대권이 분리됨으로써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됨. 따라서 6월 이후 한나라당은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한나라당의 당 대회에서는 소장파의 '40대 기수론'의 부각과 대선주자들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측근인사들의 지도부 진출 여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임.

(2) 열린우리당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귀와 ‘2월 전당대회’에서의 흥행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한나라당에 비해 대선후보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카드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한나라당의 ‘박-이’ 간의 경쟁의 본격화 될 경우 경선과정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장점이 부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나 이미 예상된 결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친노세력과 기타 세력들간의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예상외의 선전을 할 경우 당내 계파간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
-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새판짜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유지될 경우 기타 정치세력들과 연합하여 반 한나라당 전선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임. 특히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여권에게 충청권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지역연합론, 민주통합론, 반영남 통합정당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참여정부의 개각 과정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호남권 챙기기 시도될 수 있을 것임.

(3) 민주당

- 지방선거에 올인 할 것이며,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통한 독자 생존으로 열린우리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임. 호남에서 열린우리당이 선전할 경우 통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주요 단체장을 석권할 경우 중부권 신당과의 연대 또는 고건 영입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개별 탈당을 통한 독자생존이 가시화 될 것임.

3) 대통령 관련

-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약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여당발 정개개편으로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요구 등이 예상됨.
- 역대 대통령들을 레임덕에 빠뜨렸던 측근 비리는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며, 내치에 따르는 대통령의 부담도 책임 총리제와 실세 장관들의 선전(?)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당·정 분리 등을 통하여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만한 계기는 거의 차단되어 있음. 반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남·북 정당회담 또는 특사 파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와대는 큰 틀의 정치구상과 외치 및 국가 관리, 내각은 국가운영 및 참여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추진을 담당하는 당정청분리가 가시화 될 것임.

4)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정개개편을 시도,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임.(반한나라전선) 다른 경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분당을 통한 재편이 있을 수 있으며, 다당제의 형성과 연합정부 가능성 있음.
-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상 개헌논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12년까지 개헌문제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5) 기타 주요지점

(1) 실용주의

- 정치권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확대, 노동계에서의 실용주의 노총 탄생 등 안정과 개혁의 병행을 추구함으로써 광범위한 중간층 포섭 가능성 있음. 노동계는 민노총-제3노총-한국노총, 정치권은 한나라-한나라 좌/열린 우/민주-열린 좌/민노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임

(2) 시민·사회운동 재편기

- 노동계와 시민단체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 있으며, 이들 역시도 재편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3) 포스트 햇볕정책 구상 가시화 될 듯

- 동북아 안보 포럼 내지는 북 인권관련 기금제안 등 포스트 햇볕정책 구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임.

(4) 사회협약

- 미래구상과 향후 국가운영 틀로써 사회협약 내지는 그와 유사한 제안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사회협약은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등과 같은 모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틀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포스트 연정의 틀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미뤄온 개혁 추진 여부

- 시민사회의 개혁역량이 충분히 누적되어져 왔고, 개혁세력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처리’ 를 계기로 하여 지체된 개혁을 폭발적으로 전개할 가능성 있음. 참여정부의 국가 미래구상 선포와 맞물린 정치개혁은 헌법개정,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논의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

- 2006년은 서민경제 회복(사회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차별폐지)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해
- 2006년은 지방선거 승리와 당의 혁신, 대선 준비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

○ 2006년은 2006-2007-2008 정치격변과 권력재편기의 첫 출발점이다

- 지방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며, 집권의 향배를 점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모든 정치세력이 사활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각 정치세력은 대선 승리를 겨냥한 정치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 당에게는 3당의 위상을 확인하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재도약 하는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향후 정치일정을 크게 좌우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전면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선거의 성과 정도에 따라 향후 민주노동당 활동 전반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각 정치세력의 정쟁과 경쟁 속에서 이합집산과 정계개편이 촉발될 것이고, 개헌 및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의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당 정치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당의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 2006년,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빈곤과 차별 문제, 양극화 해소가 사회의 중심의제가 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한아세안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강행할 것이며, 이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빈곤과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강제하며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작년에 이어 더욱 극심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경제 거시지표 상승과는 반대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가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조성할 것이고, 국민적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당은 ‘사회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차별폐지’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전략적 과제로 안고,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당의 일관된 성과를 추진하며 선명성을 드러내야 한다.

○ 2006년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의 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6자회담을 정점으로 한 북미간 대결과 대화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은 6자회담 경색화는 물론 인권, 마약, 위폐,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은 핵억지력 강화와 경제봉쇄 무력화로 정면 대응할 것이다.
- 또한, 중미 견제와 패권을 배경으로 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신한미동맹 추진은 종속적 한미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 미일군사동맹 확대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 반면,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은 연대와 공조 강화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 강화를 제기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반복반동 일세력의 움직임과 한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다.
- 따라서, 당은 ‘2005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민족공조의 획기적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관성적 통일운동이 아닌 진보정당의 통일비전을 구체화하는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을 이루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 당은 전당적 쇄신을 통해 혁신하고,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결집을 이루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 2005년 제3기를 마무리하며, 전당적 쇄신안을 전당원 토론에 부쳤다. 이를 통해 당은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당은 전당원의 지혜를 모아 쇄신안을 확정짓고, 전당적 혁신과 실천을 통해 거듭나야 할 과제가 있다.
-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조직적 단결과 태세를 발전시켜 보수대연합 공세에 대응하고, 진보운동을 강화시켜 낼 시대적 요구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운동 진영과의 관계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한다

2006년 4대 사업목표

1. 5.31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진보정당 위상 강화 및 대선 승리 준비
2. 사회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차별폐지로 서민경제 회복 및 당의 전략적 기반강화
3. 민족공조의 획기적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환점 마련
4. 당 쇄신을 통한 전당적 혁신 /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발전 실현

1. 5.31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진보정당 위상 강화 및 대선 승리 준비

지방선거는 2005년 쌀 투쟁과 비정규 투쟁을 이어 ‘서민경제 파탄내고,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장’ 이자, 사회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의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장’ 이다.

범국민적인 대정부·대보수정치권에 대한 투쟁과 심판 여론을 조직하고, 진보적 의제에 대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1) 일사분란한 전당적 선거체제로 승리의 토대 구축

- 전당적인 선거운동본부 구성과 일사분란한 체계를 구축하여 통일적인 선거방침과 전략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
- 전국적 현황 및 선거운동을 총괄·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당적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 전국 공동공약과 지역별 공약 등 실효성있는 정책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전당적 쟁점공약, 지역별 의제공약으로 대중적 지지 확보

- 대중적 여론 형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당의 통일적 공약을 마련하여 선거 쟁점의제를 선점한다.
- 추상적 의제 수준을 넘어 구체성, 현실성, 대중성이 담보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과 결합된 대국민 정치를 결합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다
- 지역 핵심의제 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지역이슈를 선점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지지를 확보한다.

3)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의 실정에 대한 범국민 투쟁과 규탄 여론 조성

- 쌀 개방 및 살인폭력진압, 비정규 양산법 일방처리 등 노동자, 농민 생존권을 유린한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에 대한 실정을 폭로하며, 범국민 투쟁을 전개하고 범국민 규탄 여론을 조성한다.
- 노동자, 농민, 서민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빈부격차 심화, 빈곤과 차별 확대 등 기득권 세력의 실정에 대한 반국민 정서를 확산하고, 당의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4)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선거운동을 통해 광범위한 지지연대 확보

-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에 대한 범국민 투쟁을 통해 전국 광역 시도별, 시군구별 공동연대투쟁체를 건설하고, 전국 시군구에서 연대투쟁을 공동선거운동으로 이어낸다.
- 모든 부문을 모아 각계각층의 지지연대 선언을 조직한다.

5) 지방선거의 성과에 기초해 당 지역 정치활동 강화를 통한 당 기반 확대

-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다수의 당선자는 당의 자산이자, 당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다.
- 지방선거 당선자를 정책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당적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당 정치활동 강화를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당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

6) 지방선거와 대선의 연계전략 구사 및 대선의 구체적 준비

- 2006 모든 정치활동은 대선을 목표로 하여 전개된다. 지방선거 또한 대선을 겨냥하여 진행되고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 대선후보군의 조기 가시화 및 활용을 구체화하고, 대선을 겨냥한 이슈를 제기한다.
- 당내에 대선을 겨냥한 이슈 및 기획팀을 구성하여 이슈 개발 및 대선후보군 관리를 구체화한다.
- 지방선거 이후부터 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선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보궐선거의 내실있는 준비

- 7월, 10월의 보궐선거를 내실있게 준비한다.

2. 사회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차별폐지로 서민경제 회복 및 당의 전략적 기반확보

사회양극화 해소, 빈곤퇴치, 차별철폐의 정책적 대안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

중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민생 대안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주거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법으로 서민복지를 현실화하고, 생태환경이 보존되는 사회체제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 진보적 의제를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의 전략적 기반이 되는 조직계층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당의 지지를 견고하게 하여 당의 안정적 조직기반을 확보한다

1) 사회양극화 해소, 빈곤문제 해결, 차별 폐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의 정책 대안 제시

- 가칭) ‘조세개혁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운동본부’ 를 설치하고 전당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문제 해결, 차별 폐지를 위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한다.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생산하고 민생정당으로서의 내용을 강화한다.
-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주택.상가 임대차 문제 등 실질적인 민생안정의 대안을 마련한다.
-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퇴치, 차별철폐를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본적 농업회생의 대책 마련

- 당 중점사업으로서 비정규직 사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책수립과 더불어 중앙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조직사업과 대중사업을 전개한다.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한다.
- 근본적 농업회생의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농업생산 지원 등 실질적인 농업지원정책과 농민생계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한다.
-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대중투쟁과 당의 대응 및 흐름을 일치시켜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한 기본대중의 주요요구를 사회적 의제화하고, 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유기적 발전관계를 통해 당의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한다

3)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주거 공공성 실현 사업 전개

- 무상의료, 무상교육 운동본부 사업을 일상화, 안정화한다.
-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 공공성을 위한 입법을 실현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부유세 도입을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주거 공공성에 대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4)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책 제시

- 여성 및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실현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내용을 강화한다.

5) 생태환경 구축 대안제시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

-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개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민족공조의 획기적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전환점 마련

한반도 평화 불안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전쟁계획을 완전 중단시키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며, 남북 정당.정치인의 공조 실현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민족공조의 장을 창출한다.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구체화.현실화에 따른 민중생존권과 동북아시아 평화 위협에 맞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주한미군 동북아지역군화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

1) 한반도 평화불안 원인을 해소하고, 평화정책을 위한 운동 전개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전쟁계획 완전 폐지를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활동을 전개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론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한다.
- 국방예산 및 무력증강을 반대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운동을 전개한다.

2) 남북 정당.정치인 교류와 공조를 실현하고, 민족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개

- 2005년 최초의 남북정당교류 성과를 이어 정당교류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남북 정당.정치인 교류와 공조를 실현한다.
- 6.15공동선언을 전면화하고, 6.15공동선언 국회비준 및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 당이 앞장서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지역조직을 내실있게 강화하고, 정당의 역할을 높여내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질적강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민족공조를 구현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족공조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반대 투쟁 전개

- 평택 토지강매 및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반대를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 전시작전권 환수 및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4. 당 쇄신안을 통한 전당적 혁신 /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발전 실현

전당원의 지혜를 모아 당 쇄신안을 채택하고, 진보정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당적 실천과 혁신을 실현한다. 지도부로부터 지역위원회, 분회까지 통일적으로 혁신하여 진보정치의 재도약과 발전을 이루고, 국민적 지지를 비약적으로 높여낸다.

또한, 당이 중심에서 서서 진보운동진영의 새로운 단합과 태세를 구축하고, 진보운동진영의 발전을 이룩하며 시민사회운동 진영과의 관계를 폭넓게 강화한다

1) 비정규직 조직화와 및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 대변을 당의 전략사업으로 분명히 하고, 당력을 집중한다.

- 비정규직 사업강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 비정규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별 비정규 사업태세를 정비한다
- 전당적 투쟁으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2) 당 운영을 쇄신하고 지역사업을 강화하며 당의 일치성을 드높인다.

- 당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도력을 확보한다.
- 원외와 원내의 유기적 일치성을 더욱 강화하여 대중정당다운 활동상을 정립해 나간다
- 지역사업을 강화하고, 기층 조직생활력을 강화한다.
- 과도한 정파대립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3) 정책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강화한다.

- 전략적 중점과제, 당면과제 등을 분명히 설정하고, 당 정책을 현실화.구체화하는 정책기능을 높여낸다.
-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대중적 정책을 생산하고 의제화한다.
- 사회적 이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기동성을 강화한다.
- 정책생산 시스템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4)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사전 검증의 제도적 장치, 엄격한 처리 규정과 제도를 강화한다.
- 당 간부 및 당원, 공직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를 통해 진보정당 당원의 상, 당 간부의 정형, 청렴한 공직자상 등 모범을 정립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 지역위원장, 중앙당 실장급 이상의 당직자 및 전 공직자의 재산내역 및 취득과정 공개를 의무화한다.
- 비리 및 도덕성 훼손 관련자의 당직 및 공직 진출 금지를 제도화한다.
- 공직후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 및 도덕성 훼손사안 발생시 해당당부 지도부 및 최고지도부의 관련사건 당기위 제소 기능을 의무화한다.
- 노동계 등 진보진영내 비리발생시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보진영 자정운동, 정풍운동 등 공동의 운동을 전개한다.

5) 새로운 단합과 태세를 통해 진보운동진영의 발전 실현

- 진보민중운동 진영의 단일연합체 건설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정치적 주도성을 발휘한다.
- 시민사회운동 진영과의 조직적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당의 기반을 폭넓게 강화한다.

1. 정치지형에 대한 분석과 당의 조건

1) 정치지형

(1) 사회 양극화(빈부격차) 해법을 둘러싼 경쟁 가속화

- 2006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서민경제는 급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비정규직 확대, 빈부 격차,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투기의 재현, 중소기업의 경쟁력 취약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복지제도의 미비로 인한 빈곤층 등의 사회적 불만 고조
- 사회양극화는 대선, 총선까지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함.

(2) 대권(후보)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유동성의 심화(정계 개편 및 대선 구도)

-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은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 당내 갈등 등 정치적 유동성 심화 경향 가속.
- 한편, 각 당은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갈등.내분이 격화될 것이며, 이는 각 당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지방선거 후 각 당은 대선후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아젠다와 이슈(대선공약 차원)를 제기하며 여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을 것임.
-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레임덕이 예상될지라도 ‘후계자 문제에만 집착했던’ YS, DJ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후계구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대선 이슈(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지역주의 극복,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와 화두를 제출 할 것임.

(3) 지역주의의 재발호와 ‘민주세력 결집론’

- 보수정당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면서 지역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유포, 확산시킬 것임.
- 열린우리당 GT 등이 주장하는 ‘반한나라당 전선 - 민주세력 결집론’ 은 안팎에서 끊임없이 당파 지지층을 교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남북관계

- 6자회담, 북핵문제 등이 국내정치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임.
- 지지율이 낙스 이후 최악인 부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임.
- DJ의 2차 방북 여부(4월)
- 북한 인권, 위폐, 남북협력, 북핵 등에 대해서 당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임.

(5) 원내정치의 흐름

- 올해부터 선거국면이라는 성격이 원내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임.
(정치일정 : 2/18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 5/24 하반기 원 구성, 5/31 지방선거, 7/26 재보궐 선거, 7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정기국회, 2007년 2월부터 각 당 대선후보 경선)
- 때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각 당의 치열한 경쟁과 정쟁이 심화될 것.
- 각 당은 대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것임. 향후 상임위 활동 등의 무게 중심은 대선 이슈의 생산.확대의 정치적 공세가 될 것이며, 당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

2) 당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

(1)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부패, 정파간 갈등, 정규직.비정규직 대립 갈등)

- 비정규직 법안 / 노사관계로드맵 등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예상
- ‘민주노총과 당’ 을 동일시하는 국민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운동진영과 당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

(2) 당원 확대 속도의 하향 및 지지자층 참여의 저조

(3) 당내 정치에 고착, 정책의 구체화 부진

- ‘국민, 지지자층과 공감하지 못하는 당내 논의구조와 문화’ 의 혁신은 당이 향후 3년 선거국면에서 ‘정상적인 성장 궤도’ 에 진입할 수 있을지 ‘진보 자민련’ 으로 고착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

(4) 국민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에는 재정.인력난의 가중

- 과감한 포기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5) 민주노총 등과의 제 현안으로 인한 결합력 정체(대의원 할당 등)

- (6) 시민사회 진영의 당에 대한 우호적 입장에서 중립으로 전환, 선거가 격화됨에 따라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적극적, 간접적 열린우리당 지지 가능성 높아짐.
- 뉴레프트(친 열린우리당) 등 다양한 세력 등장은 당의 외연 확장에 장애요소
 - 진보적 네트워크 구축은 사활적 관건임.

2. 의정활동 방향과 과제

3년간의 선거국면은 의원의 개별 상임위 의정활동보다는 대선주자와 대선 이슈를 중심으로 각 당이 경쟁하는 체제임. 지난 17대 전반기와는 다른 형태의 의정활동이 요구됨.

1) 핵심지지층 공고화와 지지율 15% 확대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 블루칼라층, 15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으로의 구축(블루칼라의 이해관계의 대변)
- 화이트칼라층의 지지는 당의 개혁성, 선명성 등으로 유지해야 함.
- 여성 지지층에 대한 공략방안 마련 (당 차원의 기획여론조사 필요)
 - ※ 여성의 당에 대한 인식, 이미지, 기대, 공략지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 절실.
- 영호남, 충청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공략 방안 수립 필요.

2)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명한 국민적 인식 확보

-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 국민적 비난 여론이 있다손 치더라도 때론 강하게 이익옹호 필요
- 선언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정당
 - =>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 등에 대한 주요정책 제시 필요.
- 소수 운동권이 아니라 다수 당원과 지지자가 참여하는 정당
 - => 당의 주요 행사를 광범위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획, 집행 필요

3)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확고한 중심성 확보

- (사회양극화(빈부격차)의 원인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입체적인 대안 수립)
- 재정확보 방안 : 증세 대 감세 논쟁(부유세 적극 도입), 조세 개혁
 - 비정규직 문제
 - 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재벌개혁
 - 일자리 창출
 - 의료, 보육, 교육 등 복지정책에 대한 총체적 상 제시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 국민연금, 양육 및 보육 지원
- 농업희생 정책(계층별, 사안별로 핵심 타겟층을 지지층으로 굳히는 활동의 강화)

4) 대선공약과 이슈를 준비하는 방향의 의정활동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 투쟁을 전개 : 대안적 사회상 제시)

- 상임위 한계를 넘어서 대선공약과 핵심 이슈파이팅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정활동 방향 수립
- 각 핵심 분야별 전선구축(진보 대 보수), 바리케이트 치기
- 당의 이름으로 총체적 전선구축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이슈(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필요

5) 개헌 : 권력구조 개편과 사회적 요구의 확대

※ 개헌에 대한 접근 태도에 대해 논의 필요

- 개헌국면에 대한 성격 규정 : 당이 중심적 개헌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소모적 논쟁 불필요, 민생중심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필요.
-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시 개입 : 사전에 당론은 마련

(1) 권력구조 개편

- 87년 체제의 반성과 개편
- 4년 중임 대통령제
- 결선투표제 (당의 중단기적 유불리를 따져 당론변경 여부 검토 필요)

(2) 사회적 요구의 확대

- 인권 신장, 기본권의 확대, 토지공개념, 행복추구권의 확대

(3)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대비

- 영토조항, 평화협정

6)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1) 4월 진보국감 - 상시 국감체제

-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준비하여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주 3회 이상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의정활동 기획 필요
- 의정활동을 통해 당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상임위원으로 국감 준비하듯이 핵심사안과 이슈를 발굴해내야 함.

(2) 지방선거 지원

(3) 정당 대표자 방송 토론 :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상반기 4회 예상

7) 당에 대해 책임지는 의원단

- 선거시기는 의원 개인보다는 당의 총체적 평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결정함.
- 당 현안에 대해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요구됨.
- 당과 협의를 통해 전당적인 사업에 의원단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방안 마련.

8) 원내 교섭력의 확대

- 제도개혁의 효과를 노리는 협상 추구
- 국면을 길게, 크게 보고 교섭을 진행해야 함.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성)
-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구제 개편 / 국고보조금 개혁
-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전략적 판단

조기 대선 체제 :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 필요

- 다양한 후보군의 대선 출마 가시화와 조기 출마 선언
- 대선 후보 중심의 의정활동 / 당 활동
- 진보진영과 지지층 / 국민적 관심 속에 치루어지는 대선후보 경선

■ 주문 사항

1. 제출된 2006년 지방선거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2006년 지방선거 계획

1. 2006-2007-2008년 시기, 당의 발전 과정 및 정치적 목표

-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 각 선거전략 또한 상호 연관성 하에서 수립되어야 종합적 방향이 될 수 있음
- 2006년 지방선거의 성과 정도가 2007년 대선의 성과를 결정하는 토대가 되며,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의 결과는 2008년 총선에서 당의 승리 및 성과 여부를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임
- 2006년 지방선거의 성과에 근거해 당은 2007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치열한 대권쟁투의 와중에서도 의미있는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치 영역을 구축해야 함, 이는 구체적으로는 당 지지율에 근접한 득표를 획득(200만표 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
- 2008년 총선을 통해서 당은 제3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현재 기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결국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제3 정치세력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과 함께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기본목표임

※ 참고) 역대 선거 득표현황

구 분	97 대선	2002 지방선거	2002 대선	2004 총선
지지 및 득표율	306,026(1.2%)	1,339,728(8.1%)	957,148(3.9%)	2,773,769(13.0%)

2.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치세력 동향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민주당, 중부권 국민신당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임
- 한나라당은 유력한 대선주자 보유, 나름의 개혁조치, 보수세력 결집,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 등으로 인한 높은 지지율을 지속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기본 선거전략은 이러한 유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전면 부각하여 노무현 정권 심판론과 한나라당 대안론(대망론)으로 선거를 몰아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대선필승론을 당 내외에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에 임할 것임
- 열린우리당은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를 통한 한나라당 대망론 차단, 개각을 통한 민심 수습, 남북관계 개선, 각종 민생현안 해결 방안 제시, 범 개혁세력 재결집 시도 등을 통해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이미 역전된 호남 지역의 지지에 근거해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전술을, 중부권신당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3. 민주노동당의 조건

1) 객관조건 및 극복해야 할 제 측면

- 재보선 패배,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등으로 인한 당 내외의 위기의식이 높고, 2002년 지방선거, 2004년 총선 때 당이 가졌던 ‘신선하고 참신한 진보세력’ 이미지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임
- 10% 내외의 지지율 유지 상태, 지지율을 높일 새로운 계기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유력한 대선후보 군의 등장, 당직 선거 등을 통한 정국주도 및 대중적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소재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무상의료 등 핵심 정책사업과 지역사업(지역의제)을 통한 당 정책정당 면모 제고의 제한성 및 중심의제 발굴의 어려움
- 유력한 광역단체장 후보군 부재로 인한 지방선거 추동력 미약한 상황
- 기초의원 중대선거제가 실현되었으나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분할됨으로 인해 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 현재 선거법 재개정 논의와 투쟁이 전개중이나 결과 및 이번 지방선거기 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3인 선거구는 380여개이나, 이 또한 손쉬운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당 지지율과 후보지

지율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민주당과 중부권 신당의 움직임 등으로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등지에서 3-4인 선거구에서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민주당과 중부권신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선거연합이 가능하고 이 선거연합이³⁾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호남, 충청권, 수도권은 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전반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2) 긍정적 측면 및 요소

- 심각한 사회양극화 상황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심과제임
- 각 정치권이 내놓은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일시적인 조치거나, 구체적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지고 있기에 결국 이러한 방안이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중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민주노동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을 제출할 수 있다면 유일한 서민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개발중심의 성장논리 또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님
-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새로운 정치,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대중의 요구, 새로운 인물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높다고 봐야 함

4. 당의 2006년 지방선거의 구체적 목표

1) 일반목표

- 16개 광역단체장 출마 및 평균(또는 주요지역) 10% 이상의 지지 획득
- 정당 득표(광역비례의원) 15% 이상 달성을 통한 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 기초의원 다수 당선을 통해 당의 전국적 정치기반 확보 및 대선, 총선 승리의 조직 기반 마련
- 전략지역⁴⁾당 조직 및 대중조직 기반 우세 및 평균 이상의 당 지지도 유지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당선 실현

3) 민주당과 중부권 신당의 선거연합은 구체적으로는 중부권 신당은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으며, 서울은 민주당이 경기는 중부권 신당이 후보를 내는 방식이 가능함

4) 전략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확한 조사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시도당과 협의하여 설정해야 함(당 지지도, 당 조직 기반의 정도, 역대 선거 결과, 후보의 인지도 및 기반)

2) 세부목표(안)

- 전국 기초의회(234개)별 1인 이상의 의원 당선
- 당 지역위원회별(180개) 1인 이상 당선
- 기초의원 3인 선거구 30%(130명) 이상 당선 실현

5. 선거기조 및 정책 방향

1) 2006년 지방선거 기조

(1) 2006 지방선거 기조

-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 및 사회공공성 강화의제 전면화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제기 및 이슈화
- 지방정치의 근본개혁 및 주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

※ 선거 캐치프레이즈 전당적 공모

- 전 당원을 상대로 캐치프레이즈 공모(홈페이지)
- 채택된 당원 및 지역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지난 선거 주요 기조

□ 2002 대선

- 평등과 자주
- 평등한 세상 좇대있는 나라

□ 2004 총선

- 진보 대 보수, 평등과 자주
- 부자에서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2) 지방선거 정책 방향

(1) 기본방향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기본방향은 성장, 개발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제출할 것임,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해소, 복지, 환경,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 등이 기본방향이 될 것임
-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식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당의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에 대

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야 함

- 동시에 선거의 표적집단이 되는 대상별 정책공약을 제출해야 함, 노인, 3-40대 주부 등 당의 주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출해야 선거시 지지도 가능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들을 당의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함
- 표적집단별 정책에 근거해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당 차원의 이슈 파이팅과 지역에서의 사업을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

(2) 사회양극화 및 민생관련 정책 방향

- 모든 정당이 사회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해소, 서민경제 회복을 주창하고 있음, 심지어 정동영 김근태도 800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서고 있음
-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민주노동당’ 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반향이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임
- 결국 민주노동당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구체성, 현실성, 대중성 있는 정책을 제출하고 대중을 설득하는가에 달려 있음
- 정책생산의 영역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빈부격차 해소 및 빈곤문제 해결방안’ ‘조세개혁 영역’ ‘부동산 대책’ ‘의료, 교육 영역’ 임
- 이러한 영역에서 대중적 설득력과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출되어야 함

(3) 지방정치의 근본 개혁

-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토호세력의 기득권, 영향력만 강화시켜 지방자치 실현의 진정한 의미에 역행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의 제도적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함,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참여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함
- 이와 함께 역교부세 도입, 비율조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의 물적 토대를 강화해야 함

3) 정책공약 - 별첨

6. 선거 승리 기본방침

1) 당 지지율 상승 및 당 정치활동 확대, 강화

(1) 현황

- 민주노동당은 원내 3당에서 4당으로 정치적 조건이 변화했으며,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상태임
- 당 지지율 또한 총선 이후 정체 및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진보정당으로서의 생동감을 되살리고, 정치활동을 강화하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사업이 전개되어야만 지방선거의 객관적 조건을 유리하게 변화시킨 조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음

(2) 당 지지율 제고 방안

- 당 지지율 상승은 당의 이미지 제고 및 언론사업이 기본임
- 진보정당의 중요성 및 역할론에 대한 대중적 제기와 진보정당 이미지 제고
- 대선후보 조기 가시화를 통한 발언권 강화
- 당 정책활동 및 민생활동 기획 및 사업 강화, 정책사업과 대국민정치의 결합

(3) 대국민 정치활동의 전면적 강화 - 더 깊이 대중 속으로!

- 2007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를 앞세운 여야 각 당 및 각 정치인의 대국민 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유력한 대선후보군이 부재한 현재의 당 상황에서 거대 정당식의 대국민 정치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주노동당식 대국민정치의 전형을 창출해야 함
- 정책과 결합된 대국민 정치의 기본방식은 중앙당 차원의 정책적 이슈파이팅, 당 지도부 및 대중적 인지도 높은 의원단을 앞세운 지역밀착형 대국민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 3-4-5월에 걸쳐 테마별로 지역과 현장을 순회하고, 이 활동과 지역사업을 결합하는 것이 기본방식이 될 것임
- 주요 이슈별 정책 발표(발표 방식 기획)
-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공동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집중 개최
- 지역, 현장 순회와 후보자들의 연관을 강화하고, 선거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사업 전개

※ 기본방식 1)

- 조세개혁을 위한 당 정책수립 및 입법발의
-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원단 지역 및 민생현장 순회
-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민주노동당 00지역 정책발표회
-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00지역 토론회(당 및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참가)

(4) 의원단 활동 강화

- 3-4월 과정에 국정감사 수준의 집중적인 활동을 통한 이슈 개발 및 이슈 파이팅
- 언론 노출 극대화를 통한 당 이미지 제고
- 의원단 차원의 시민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순회 활동 강화

2) 후보전술 및 당선 전략

(1)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

- 광역단체장 선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일정 조정 및 배치(먼저 선출한 지역의 경우 시도당별 필승 결의대회 등을 중앙차원에서 조정하여 배치)
- 주요지역 설정 및 집중 지원
- 중앙 차원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의 홍보 및 사업 집중 배치(기획사업, 공약발표 등)
-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미디어 토론 집중 교육 및 지원

(2)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기초의원 당선 전략 수립

- 당 지지율과 후보지지율 일치 및 동반 상승대책
- 당선을 위한 전략과 선거 전술
- 지역의제 개발 및 집중활동
- 지도부 및 의원활동 집중배치
-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3인 이상 선거구 집중지원 방안 수립(기초의원 당선 전략지역 선정)

(3) 농촌지역 당선 전략

- 농촌지역 선전 여부가 당 선거 승리의 주요 변수
- 당 조직기반과 농민회 기반에 근거한 선거 승리
- 농촌지역 중 선거가능성과 이후 당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전략지역 설정 및 집중지원
- 쌀 비준안 저지 투쟁을 통한 당의 정치적 기반 강화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 전형 정리
- 농촌지역 대책과 관련한 정책대안 마련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정치행보
-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호별 방문 및 홍보
- 집중적인 농촌 지역 주민간담회(의원 및 당 지도부)

※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도, 농 복합지역의 경우 당과 노동조합, 농민회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운동이 당 조직발전 뿐만 아니라 선거 승리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
- 당 지역위, 노조(농협, 사회보험, 전교조 등)와 농민회 등이 하나의 선거체계로 결합되어 선거운동 전개해야 함
- 당, 민주노총, 전농이 중앙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공동의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적 지침으로 정리해야 함

(4) 기초단체장 당선 대책

- 광역별 전략지역 선정 및 집중 지원을 통한 당선 및 득표율 제고
- 경남, 전남, 전북 등 전략지역 선택 및 집중지원
- 대중조직 차원에서 전략지역 집중 지원 방안 강구

(5) 당 역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제한된 당의 역량을 평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주요목표, 전략단위, 전략지역에 대한 당의 힘을 집중해야 함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각 선거마다 전략단위 및 지역 설정하고 당 역량(재정, 조직, 홍보, 지원 등)을 집중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진보정당 이미지 강화 사업

(1) 현황

- 민주노동당은 당내의 도덕성 관련한 몇가지 사안 및 노동계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고유의 장점인 도덕성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 또한 진보정당임에도 참신하고 신선한 이미지 보다는 칙칙한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과 함께 선거 승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여성후보 역할 부각 및 당선 대책

- 여성후보 20%는 당의 진보적 이미지 강화의 주요 계기임
- 여성후보 20%의 의미를 집중 부각해야 함
- 여성계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여성후보 지지 및 당선 호소 여성선언 등)
- 여성후보자 대회, 여성정책 발표, 등 기획사업 배치

(3) 후보검증, 도덕성 제고 사업 전개

- 후보검증 활동에 대한 집중 홍보(사례발표, 언론홍보 등)
- 중앙당 차원의 대규모 청렴 서약식(후보자대회 시 진행)
- 시도당 차원의 기획사업 배치

(4) 새로운 공직자 상 제기(유급화 대책 집중 부각)

- 지방선출직 공직자 유급화에 대한 당 방침(도시노동자 평균임금) 집중 부각
- 선출직 공직자의 노동자 선언(?) 등을 통해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 상 제기
- 중앙당 차원에서 유급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사용내역 공개 등)

4) 선대본 구성 및 운영

(1) 선대본 구성 기본원칙

- 진보진영 전체가 결집하는 선대본을 구성한다. 중앙당, 시도당, 시군구까지 가능한 최대한 광범위하게 구성한다.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단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배치한다.

(2) 구성방안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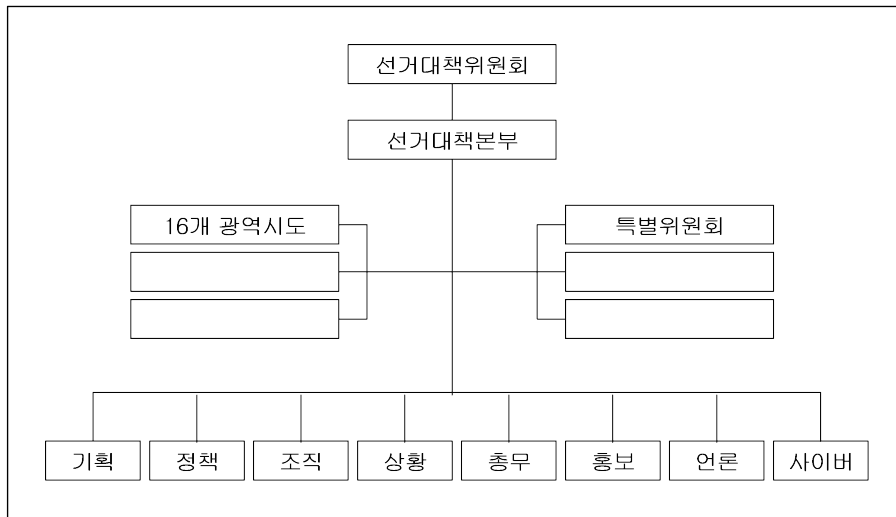
- 당 최고위원, 의원단 전체가 선대위원으로 참가한다.
- 진보진영 주요인사 및 대중조직 대표자 또한 선대위원으로 참가한다.
- 다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당 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공동선대본부장을 예비 대선 후보군으로 적극 내세운다.
- 선대위 산하에 선거대책본부를 두고 사무총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 선거대책본부 산하에는 ‘사회양극화특위’ 등의 특별기구와 상황, 기획, 조직, 정책, 홍보, 대변인, 총무 등의 부서를 둔다

(3) 각급 체계 및 부서의 역할

- 선대위원회 : 최고결의 기구로서 선거 전반을 지휘한다.
- 선거대책본부 : 실질적 집행기구로서 선거전반을 집행한다.
- 특별기구 : 조세개혁,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기구로서 정책, 정치활동 전개
- 상황 : 상황 전반을 총괄한다.
- 기획 : 선거기획
- 조직 : 시도당 선본과의 유기적 결합, 지도부 및 의원단의 유세지원 계획 및 일정 수립과 집행

- 정책 : 정책생산 및 지원
- 홍보 : 홍보매뉴얼 작성, 홍보지원
- 언론 : 대언론 사업
- 사이버 : 인터넷 등 사이버 대응 및 지원
- 대변인 : 선거전반에 대한 대변활동
- 총무 : 재정관리 및 재정지원

(4) 선대본 조직도



5)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의 결합

(1) 기본방향

- 대중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선거와 결합되도록 하고, 주요 대중투쟁이 선거투쟁과 흐름이 일치되도록 한다.
- 특히 노동자, 농민투쟁의 흐름과 선거투쟁을 흐름을 하나로 만들어 나간다.

(2) 대중투쟁 영역

-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기본대중 권익보호 투쟁
- 한미 FTA 저지 및 스쿼린 쿼터 사수 투쟁
-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 및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
- 평택미군기지 투쟁, 미군전략적 유연성 반대 투쟁 등 반전평화 투쟁

6) 재정

(1) 세액공제 사업

- 지난해 세액공제 사업은 당과 민주노총의 사정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세액공제 사업이 가능한 3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세액공제 사업을 전개해야 함

(2) 중앙당 국고보조금 집행 방안

- 중앙당 국고보조금 중 광역단체장 후보 기탁금 지원액 제외한 금액 사용방향 수립
- 여론조사 시스템(ARS) 구축, 여론조사, 홍보비용(특별당보), 후보교육, 정책공약 개발비, 기획사업비, 행사비(후보자대회 등), 유세지원비용, 여성후보 30% 실현지역 인센티브 제공비용 등일 것임
- 세부 재정내역 추산자료 (별첨)

(3) 2006 지방선거 재정 추계(안)

■ 수입

- 중앙당 국고보조금
 - 선거지원금 : 20억
 - 여성추천보조금 :

■ 지출 (지출총계 : 20억)

- 16개 광역도지사 후보 기탁금 지원 : 8억
- 여론조사 시스템(ARS) 구축 및 운영(전화비 포함) : 2억
- 전국 여론조사 및 기획 여론조사 : 1억 9천만원
 - 전국 여론조사 3회 : 3000만원
 - 광역별 기획 여론조사 : 1억원
 - 전략지역 기획 여론조사 수회 : 6천만원
- 홍보비용 : 5천 2백만원
 - 특별당보 8회 제작 : 4백만원(20만부) * 8회 = 3천 2백만원
 - 홍보메뉴얼 제작 : 2천만원
- 후보교육 관련 : 1천만원
 - 미디어 방송토론 및 후보자 소양 교육

- 정책공약 개발비 : 2천만원
 - 전문가 섭외 워크샵 등
 - 각종 정책관련 토론회 개최

- 기획사업비 : 2억원
 - 각종 기획 토론회 개최 (진보진영 단결, 선거 승리 전략 등)
 - 각종 기획사업(당원 전진대회, 진보진영 단결의 밤 등)
 - 기타 기획 사업(전략지역 및 우세지역 기획사업 등)

- 행사비 : 2천만원
 - 후보자대회
 - 각계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

- 당 지도부 유세 지원 : 1억 5천만원
 - 3월부터 진행
 - 지도부 및 수행원 활동비 : 30인 * 식사(3끼 *5000) = 약 50만원 * 90일 = 4천5백만원
 - 홍보 팜플렛 및 플랑, 선전물품 등 : 5백만원
 - 차량 렌트 및 운영비
 - 숙소 사용비
 - 기타 예비비

- 로고송 제작 : 7백만원

- 여성후보 30% 실현지역 인센티브 제공 비용 등 : 3억
 - 여성정치발전기금
 - 기탁금 지원 등

- 예비비 : 5천만원

7) 홍보

(1) 원내활동 성과 및 지방자치 모범사례 정리

- 지난 2년간의 국회의원 활동 성과 정리(당이 한것이 뭐냐?)
- 지방공직자 활동성과 정리(민주노동당 의원 한명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2) 정기적 당보 배포

- 정기적 당보 배포를 통한 대국민 선전 강화

(3) 당 홈페이지 기능 개편

- 진보적 정치담론 주도하는 홈페이지
- 유권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 가능한 홈페이지
-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 당 대회 전후한 시기에 개편단행
- 5월 후보 등록 시점에서 전면선거체제로 개편
- 전국적 연고자 사업 역할

(4) 홍보 매뉴얼 작성

- 포스터, 인쇄물, 명찰 등의 기본양식 작성
- 어깨띠, 유세차량, 등
- 색상, 로고송 등 당 이미지 통합

8) 후보 및 운동원 교육

(1) 후보 소양교육 및 선거운동 교육

- 지난해 광역단위별로 예비후보 선거 연수 진행함(전농 후보들은 1월에 별도의 교육 진행)
- 2006년 2월말-3월 초 사이에 선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선거 실무교육 실시

(2) 미디어 토론교육

- 단체장 및 광역비례의원에 대한 TV토론 교육
- 중앙 선본 산하에 지원팀 구성하여 집단교육
- 3월 이후 사업 전개

9) 기 타

(1) 개정 선거법 해설

- 개정선거법 해설서 및 유의점 작성 배포

- 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방식 정리

(2) 지역의제 발굴 사업

- 무상의료 사업의 제한성으로 인해 공통된 지역의제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임
- 중앙당 차원에서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전개되는 지역사업 현황 조사하고, 모범 사업을 공모하여 일반화
- 중앙당 정책단위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세부 정책 공약 제기 요구됨
- 현재 공통되는 뚜렷한 지역의제 발굴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3) 취약지역 역량 지원방안 강구

- 취약지역에 대한 선거 기획, 홍보 등의 사업 지원

7. 선거일정

1) 흐름

- 2006년 1월 :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 2006년 2월 : 중앙위원회, 후보자대회
정기당대회→선거대책본부 전환 및 선거승리 결의대회
- 2006년 3월 : 후보자 교육,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본격적 선거운동 시작
- 2006년 4월 : 대국민정치 강화
- 2006년 5월 : 후보 등록, 선거돌입

2) 시기별 주요과제

(1) 2006년 2월

- 주요과제 : 중앙위원회(선거세부 방침 확정) 정기 당대회(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 후보(시도지사) 최종확정, 선대본으로 전환, 각급 후보 선출, 선거 캐치프레이즈 공모

(2) 2006년 3월 ~ 4월

- 주요과제 : 예비후보자 등록, 전체 후보자대회, 후보 교육, 대국민정치(현장, 지역순회), 정책발표 기획사업, 홍보, 시도당별 필승결의대회 등

(3) 2006년 5월

- 주요과제 : 후보등록, 선거돌입, 전면적 선거운동

■ 참조 :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 선거일 : 2006. 5. 31(수)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06. 3. 2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005.12. 1 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규§2①
1.21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26의2③ 규§51①②
1. 31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5. 31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19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 (기타 지방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부터 5. 31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4. 1까지	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
5.12부터 5.16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16부터 5.17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20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책자형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5.22까지	월	선전벽보 첨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49⑬,65⑤ 154①⑤ 규§77
5.23까지	화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1③
5.24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6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5.31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0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6.30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법§132①② 규§56
7.30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주문 사항

1. 제출된 200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자료 추후 공지

8

당규(회기 규정) 개정의 건

■ 주문 사항

1. 제출된 당규(중앙당직자 임기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 -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1장 당선 제62조(임기 개시)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1장 당선 제62조(임기 개시)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하되,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해설>

1. 현행 임기 규정의 문제점

- 최고위원 및 중앙위원, 대의원의 임기가 기간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적용시 기준이 불분명하다.
- 임기의 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한 당직자와 기존의 당직자의 임기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료하여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구)중앙위원회가 당대회의 안건을 만들고, 새로운 선출한 대의원대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역기능이 있다.

2. 개선방향

- 올해 최고위원 선출시기와 민주노동당 창당일에 맞추어 1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선

출된 최고위원 및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사업평가와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각종 공직선거 일정(특히 국회의원 총선거 등)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선거일정을 5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차 중앙위원회 보고

1

2005년 7차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 일 시 : 2005년 12월 18일(일)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 사전행사

- 홍콩 WTO 각료회담 저지 투쟁 보고 (강병기 농민위원장)
- 비정규직 철폐 투쟁 발언 (구권서 전국비정규 연대회의 의장)

■ 개회식

- 민중의례
- 개회사 : 권영길 임시대표

■ 성원보고

- 총원 : 402명
- 재적 : 384명
- 사고 : 18(홍콩 12, 입원 5, 상중 1)
- 과반 : 193명
- 참석 : 234명(3시 5분현재)

■ 서기 감찰 지명

- 서기 : 강형구 외 김우현 김훈미 공태윤 김수정 임명
- 사찰 : 이정우, 김봉림 등

■ 회순통과

1. 안건 16을 2번 안건으로 하는 회순변경의 건
 - 이의 없이 회순 변경.
2. 보고 안건을 논의안건보다 먼저 하는 회순 변경의 건
 - 논의안건 상정시 관련되는 보고안건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는 의장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심의 . 의결안건

- 안건 1. 당 쇄신에 대한 전당원 토론자료 채택의 건
- 보고 6. 선거평가 보고

<결정사항>

당 쇄신안에 대한 전 당원 토론 자료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중앙위에서 제안.토론된 사항을 첨가하여 전 당원에게 공유하기로 함)

○ 제안된 내용

1. <핵심사업>에서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민주노총에 적극 제안하고, 관련 법 제정계획을 수립한다.’ 를 추가한다.
2. <중점 사업 1>에서 ‘당의 대외기구의 민주적이고 쇄신적인 운영방안’ 을 추가한다.
3. <중점 사업 3>의 대외적 대책에서 타조직과의 관계 내용을 구체화, 명시화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진보진영 자정운동, 정풍운동’ 을 추가한다.
4. <중점 사업 3>의 첫 번째 항도 일상적 정치활동이고, 대중단체와 정당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대외적 대책’ 을 전면삭제한다.

- 안건 2. 비정규법안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원단 총회 보고 중 비정규 법안 관련 보고

<결정사항>

사유제한 관련 단병호 의원 수정안 철회와 법안 저지를 중심으로 열심히 투쟁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 관련 결의문이 재석인원 237명 중 찬성 48명으로 부결됨.

- 안건 3. 지방 선출공직자 지원방안 및 월정수당 확대에 따른 당 방침의 건

<결정사항>

재석인원 21명 중 143명으로 원안 가결 됨.

○ 원안

■ 기본방향

지방 선출직공직자는 당으로부터 교양과 정책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 선출직공직자의 활동은 시도당의 책임 하에 운영 지도된다.

월정수당은 지방 선출직공직자 활동과 연관된 영역에 사용한다.

■ 지방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당 지원방안

1. 중앙당의 지원방안

- 지방 선출직공직자 전체에 대한 정책지원을 기본목표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관련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한다.
- 국회의원과 지방 선출직공직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장한다

2. 시도당의 지원방안

- 시도당별로 지방 선출직공직자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1인 이상 상근자 배치하며 공직활동에 대한 정책, 정무, 행정, 등의 지원을 주 업무로 한다
- 지원부서는 역량과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다(의정지원단 형태, 정책부서 형태, 전담자 형태 등)

3. 지역위원회의 지원방안

- 의원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의원활동과 지역위원회 활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1인 이상 역량을 배치하고 사업을 전개한다.
- 지역위원회별 지원부서 설치 문제는 지역위원회에서 시도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단체장에 대한 지원방안

-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에서 지원부서를 두어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단체장과 함께 일하는 정무직(비서실장)은 정책 및 정무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채용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한다.

■ 지방 선출직공직자와 당 체계

1. 중앙당은 지방 선출직공직자로 협의회를 둔다.
 -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분리 구성한다.
2. 시도당 선출직공직자 기구는 시도당에서 설치한다.
 - 기구성격, 운영, 의결단위 결합방법 등을 시도당 의결단위에 결정 운영한다.
 -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시도당 방침에 따라 활동하고, 운영위에 정기적으로 활동을 보고한다.
3. 지역위원회 선출직공직자 기구는 시도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방 선출직공직자 수당확대에 대한 대책

1. 특별당비
 - 지방 선출직공직자는 (지역구 의원은 20%, 비례의원과 단체장은 30%) 월정수당의 일정비율을 특별당비로 낸다.
 - 특별당비는 기초의원(단체장)은 지역위, 광역의원(단체장)은 광역시당에 귀속하고, 특별당비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특별당비는 의정지원 활동과 관련한 곳에 사용한다)
 -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하여 당내 선거 입후보시 서약서를 제출한다.
2. 급여 안
 - 특별당비 외의 월정수당 중 지방 선출공직자의 급여를 해당연도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활동소속 당부에 영수증 처리하여 의정활동비로 사용한다.
 - 급여는 해당 연도의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한다.
 - 급여는 매년 예산안 책정시 정하며 만원 이하는 절삭한다.
3. 기타
 - 광역자치단체 공직자, 기초자치단체 공직자의 의정활동비는 그 내역⁵⁾을 별도로 정한다.
 - 수당확대에 따른 당방침은 새로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 직장이 있는 경우 의원직 수행으로 무급 휴직이 되더라도 부가급여는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당부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수정동의안

5) 내역 : 지역사업, 정책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및 당 사업

◦ 수정동의안 1

① 급여안의 1항을 ‘지방 선출공직자의 급여를 해당연도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활동소속 당부에 특별당비로 납부한다.’ 로 수정.

② 다음을 추가한다.

특별당비의 용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특별당비 중 지방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보좌관 급여로 한다.

- 의원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로 한다.

③ <해설>에서 ‘지방선거 후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을 탄생시킨 지역위원회가 재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를 삭제.

=> 재석인원 210명 중 찬성 50명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2

① 급여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당 공직자의 급여기준을 제도화한다.

=> 재석인원 210명 중 찬성 61명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3

수당확대에 따른 당 방침은 법 시행일로부터 바로 적용한다.

=> 재석인원 210명 중 찬성 105명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4

급여안에 대해서 내용은 원안으로 하되, 지출 주체는 지방 선출공직자로 한다.

=> 재석인원 210명 중 찬성 76명으로 부결.

□ 안건 4. 당헌 제3장 대의기관에 관한 당헌 개정의 건

◦ 부문조직에 할당된 대의원의 절반을 노동부문에 할당한다.

□ 안건 5. 2006년 중앙위원·대의원 정수 조정의 건

◦ 지역대의원 총수의 25%를 노동에, 12.5%를 농민에 나머지를 기타 부분에 배정한다.

<결정사항>

표결결과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108명으로 안건 4, 5번을 반려함.

□ 안건 6. 노동, 농민을 제외한 부문에 대한 중앙위원, 대의원 할당비율 결정 건(직권상정)

<결정사항>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120명으로 가결됨.

<안건의 내용>

- ① 빈민 2%, 학생 2%,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에 각 0.5%를 배정하며, 문화예술, 환경, 중소기업, 학계, 보건의료에 최소 배정(중앙위원 1명, 대의원 4명)한다.
- ② 노동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배정을 권고한다.
- ③ 노동, 농민의 2%를 장애인에 할당한다.
- ④ 각 비율에 따른 세부 배정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정한다.

○ 수정동의안

- ① 직권상정안 1항에서 ‘장애인을 3%로’ 수정.
 - ② 직권상정안 2항을 ‘노동부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30%를 배정한다’ 로 수정.
 - ③ 직권상정안 3항은 삭제한다.
- => ①항과 ③항은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36명으로 부결.
②항은 찬성 87명으로 부결.

□ 안건 7. 당규 24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결정사항>

아래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 대의원의 경우 당원 60인당 1인씩 선출하고, 중앙위원은 200명당 1인씩 선출한다.
- 선거운동기간 삭제
-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임회하에 진행한다.

○ 수정안

- 제18조의 원안 유지(현행처럼 선출)
- => 재석인원 201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결.

안건 9. 전북도당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당권부여 심의의 건

<결정사항>

영입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권부여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안건 발의자(익산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함.

※ 가예산 심의전에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순서를 바꿔 심의함.

기타안건. 황우석 문제에 대한 비대위 대응에 대한 토론의 건.

비대위 12차 회의 결과 보고

<토론>

- 황우석 문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응 및 논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12차 비대위에서 발언한 바는 없으나 회의 브리핑의 ‘황우석 연구결과의 빛나는 성과에 ~ 찬사를 보낸다’는 표현은 잘못되었음을 밝힘.
-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한 당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2004년 공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현재의 당입장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등 관련부서와 토론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 전당원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가예산 처리전 비대위 회의결과 보고를 먼저하라는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먼저 처리함.

안건 8. 2006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

<결정사항>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한다.

안건 9. 당면 쌀 투쟁 및 농민열사투쟁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결정사항>

전농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

■ 폐회

2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 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1월 25일(수) 1시 ~ 오후 3시

□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 : 천영세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의장, 강병기 최고위원, 김기수 최고위원, 김은진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심재욱 최고위원, 이해삼 최고위원, 홍승하 최고위원

□ 불참 : 김성진 최고위원(인천시당후보선출대회참가)

□ 안건

■ 안건 1. <대표 직무대행 선출의 건>

-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선출하되, 외부적 역할은 당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단 대표 중심으로 한다.
- 직무대행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 안건 2. <최고위원회 운영의 건>

- 대표 선출전까지는 전차회의에서 차기회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고, 대표 선출 이후에 최고위원회 운영을 논의한다.
- 업무보고는 최고위원회 회의와 별개로 진행한다.

■ 안건 3. <주요 업무 및 일정의 건>

- ① 중앙위원회, 당대회 일정은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 ② 차기회의에서 업무보고 계획을 토론·결정하고, 그에 따라 2월 2일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 ③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지방선거 준비’ ‘세액공제 사업’ ‘당 쇄신안 확정’ ‘중앙당 운영방안’ ‘최고위원회 연수’ 등은 차기 회의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을 제출하여 논의한다.
- ④ 최고위원회-중앙당직자 상견례는 1월 26일 오전 9시,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는 오전 9시 30분에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⑤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는 의원단 총회 이후에 기획조정실과 의정지원단이 논의하여 일정을 잡기로 한다.

⑥ 최고위원회 워크숍은 대표선출 이후에 진행한다.

⑦ 설날 귀성인사는 1월 27일 서울역 장터방문과 장기사업장 방문 등을 기획하되, 세부사항은 기획조정 회의에 위임한다.

⑧ 1월 30일 창당 6주년을 맞아 당원과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 기타

① 정부의 공무원노조 선거 방해와 관련하여 원내외에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중앙과 지역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② 김우현 동지와 관련하여 1월 27일 경찰측, 보험회사측과의 만남 이후에 논의하여 대응방침을 결정하도록 한다.

③ 선거구 확정 및 선거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조정회의에서 지역 사무처장단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차기 회의에 안을 제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2차 회의는 2월 1일(수) 오전 9시,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1일(수) 09:00

□ 장소 : 중앙당 4층

□ 참석 : 김선동, 김성진, 강병기, 김기수, 홍승하, 천영세, 이해삼, 김은진, 이용대, 박인숙, 심재욱

□ 안건

1.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당 방침의 건

가. 김우현 동지 건

<결정사항> 정부(경찰)과 보험회사(일정부분 책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책임을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검찰에 고발, 당의 정치적 대응강화(경찰청장 청문회 등)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함.

나. 2월 임시국회 대응 건

<결정사항> 지방선거법(선거구획정) 재개정을 위해 당이 총력 대응함. 그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예:토론회, 기자회견, 지방선거 출마자들 시위 등)을 차기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하기로 함. 비정규법안 대응문제는

당 노동회의에서 논의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함.

다. 스크린쿼터 비율 축소 대응 건

<결정사항> 천영세 대표를 책임자로 하고 문예위와 대협실, 정책위를 포함하여 팀을 구성하고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함.

2. 2006년 1차 중앙위원회, 정기당대회 일정 확정의 건

<결정사항> 비대위에서 결정한 중앙위원회 및 정기당대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 중앙위원회 : 2006년 2월 18일(토) 15:00

- 장소 추후 공지

○ 정기당대회 : 2006년 2월 26일(일) 13:00

- 장소 : 올림픽역도경기장

3. 업무보고 건

<결정사항> 업무보고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람한 후 대표선출 후인 2월 11일에 하기로 함.

□ 보고

1. 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자료대체

2. 주요업무 토론 및 최고위 보고 일정 보고

3. 의원단 워크숍 보고

- 2006년 2월 3일 - 2월 4일, 제주도

4. 당 쇄신안 확정을 위한 일정 조정 보고

-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보고로 처리하기로 함.

전당원토론 진행현황 파악, 최고위(2회) 토론 등을 진행한 후 중앙위에 제출

□ 차기회의

○ 2월 6일 08:30 중앙당

■ 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3일(금)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 참석 : 김선동, 이용대, 박인숙, 김성진, 김은진, 홍승하, 이해삼, 강병기, 김기수
- 불참 : 천영세(의원단워크샷), 심재욱(출산휴가)

안건

1. 2월 임시국회 비정규직 법안 관련 대응 건

<결정사항> 아래의 내용을 결정함.

- 비정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당이 비상 대처한다.
-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 국회앞 집회, 국회앞 결의대회, 상임위 통과 저지투쟁, 전국적 선전전 전개 등을 전술적으로 고려하여 투쟁을 전개한다.
- 원내의 세부적인 투쟁전술은 의원단총회, 필요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 민주노총, 비정규 연대회의 등 대중조직과 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한다.
-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연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를 투쟁기조로 추가하고, 한국노총에 대한 대응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확인한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한다.

■ 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6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 : 김선동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박인숙 이용대 이해삼 천영세 홍승하
- 불참 : 심재욱(출산휴가), 김은진

안건

○ 안건1.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당 방침의 건

1. 삼성 대응관련 실무책임자를 다시 선정하고, 제기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2.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의원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비정규직 줄속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오늘(2월 6일) 오후 2시에 당의 입장을 밝히고 노상농성에 돌입하고, 오후 7시 30분에 민주노총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7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소위를 막는 것' 으로 하되, 의원단 총회의 논의를 거치고 이견이 있을 시에는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한다.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확인하여 차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 울산 구청장 항소기각 관련 대응방향은 제기된 바대로 진행한다.
5. '스크린 쿼터 사수 및 한미 FTA 저지 투쟁'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영화인대책위원회 농성장 방문 등 제기된 일정을 진행한다.

○ 안건2. 2006년 제1차 중앙위원회 안전확정의 건

1. <2006년 지방선거 공직후보 인준의 건>을 위해, 여성 20% 강제할당과 관련한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을 분명히 하여 공문으로 지역에 보낸다.
2. 2005년 미해결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기년도가 지났으므로 폐기하되, 꼭 필요한 안건은 최고위원회에서 재상정한다. 단, 당원발의 안건의 경우에는 대표발의자에게 공지하고 협의한다.
3. 인터넷에 당대회 토론게시판을 만들어서 당대회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9일 최고위원회부터 빠르게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한다.

○ 안건3.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3차 평화대행진 참가방침 결정의 건

- 2월 12일 오후 1시 평택에서 개최되는 <3차 평화대행진>은 수도권 지역위원회 총력집중, 타 지역위원회는 지역실정에 근거하여 최대한 집중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참가한다. 참가당원은 행사 참가비(천원)와 사전행사에 참여할 연, 현수막 및 다양한 선전물을 준비하여 참가한다.

■ 5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7일(화) 08:00
- 장소 : 중앙당 4층
- 참석 : 김선동, 이용대, 의장,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김은진, 이해삼, 박인숙, 홍승하
- 불참 : 천영세(국회일정), 심재욱(출산휴가)

현안 관련 논의

1. 삼성 관련 대응

- 적절한 시기에 의원을 대동하여, 검찰청에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2. 조세논쟁 관련

○ 조세논쟁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에서 내용과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 기획조정실.의정기획.대변인실이 논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 보고

보고1. 2006년 제4차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 대체

□ 안건

안건1. 선거법 재개정 투쟁 방안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을 7일에서 10일로 수정하여 원안통과

1) 각 당 대표 사무총장 면담 및 선관위 방문

- (1) 대표 결선 투표 직후 각 당 방문
- (2)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2) 선거법 재개정 촉구 결의대회

- 2월 10일~18일 중 오전10시 개최

3) 선거법 재개정 토론회

- 2월 8일이나 9일 중 국회에서 진행

4) 원내 대응

- 2월 6일 또는 7일 공동발의안 제출
-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한 정치협상

5) 대 언론 사업

- 방송토론, 라디오 토론 등 적극 조직
- 각급 방송매체를 통한 여론작업

6) 시도당 차원의 대응방안

- 공동발의 직후 시도당별 기자회견
- 예비 후보자들이 중심이 된 캠페인 전개

안건2. 최고위원회 워크숍 개최의 건

○ 제출된 원안에 ▲ 2006년 예산안 ▲ 당 쇄신안 ▲ 중앙당 운영방안 등 중앙위원회와 관련 된 안건을 더하여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한다.

■ 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8일(수) 08:00

- 참석 : 김선동, 이용대, 강병기, 홍승하, 김기수, 김성진, 천영세, 이해삼, 김은진, 박인숙
- 불참 : 심재욱(출산휴가)

보고1. 제5차 최고위원회 결과

- 자료대체

보고2. 비정규 법안심의 경과 보고

- 천막농성 관련

: 긴장상황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노숙농성에서 천막농성으로 형식을 전환하고, 3월2일까지의 구체적인 전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본부 등과 협의해서 안을 제출한다.

보고3. 비정규법안 주요 쟁점 및 현황 브리핑

○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이 ▲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 남은 쟁점 ▲ 정부·여당·당 등 입장 비교 등을 브리핑

안건1.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방안 건

○ 결정사항

매칭펀드제 관련 당론은 변함이 없음 확인하고, 다만 현시기에 매칭펀드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안을 통과한다. 향후, 매칭펀드제에 대한 것은 추후 관련 당론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경우에 다룬다.

○ 원안

-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 1, 2,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이상 득표하거나 5석 이상의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제2항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 득표수비율에 따라 100분의 50(或 40(或 30))을 정당별로 배분.지급한다.”

제3항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100분의 30(或 40(或 50))을 정당별로 배분.지급한다.

현안 등 기타

1. 삼성 관련

- 검찰청 항의 방문은 상황의 추이를 보되,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구체적 전술은 기초회의 등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에 제출한다.

2. 정부 공무원노조 담화문 관련 기자회견 개최

- 8일 오후1시30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참가인원은 대변인실에서 결정한다.

3. 제7차 최고위원회 개최 관련

- 내일(9일) 오전9시에 중앙위원회 안건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 7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참석 : 김선동 총장 이용대 의장, 강병기, 홍승하, 김기수, 김성진, 천영세, 이해삼, 김은진, 박인숙 최고
- 불참 : 천영세 원내대표(의원단 총회), 심재욱 최고(출산휴가)

보고1. 제6차 최고위원회 결과

- 문서 대체.

보고2. 비정규 투쟁 관련 보고

- 1인 시위를 내일(10일)부터 오전8시부터 9시까지 국회에서 진행하며, 비정규 투쟁 관련 종합계획서를 2월 13일 이후의 최고위원회에 제출한다.

보고3. 인사 청문회 결과 및 입장

- 1)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제도는 긍정적이나, 임명 이전에 사전 검증되고 걸러졌어야 할 각 내정자들의 문제들이 확인되지 않아 청문회 기간에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기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 2) 더욱이 한나라당의 경우, 인사 청문회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 ‘색깔론’ 등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구태’를 반복하는 등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 3) 각 내정자의 경우, 사회양극화.신자유주의 정책의 계승 등 기존의 정부여당의 입장을 추진하는 사람들

이어서 우려스럽다. 특히, 이상수 내정자의 경우는 당이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는 비정규 법안 개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기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보고4. 삼성 이견희 관련

○ 보고안 통과

- 1) 대 삼성투쟁 - 2월 13~17일까지 서울시당 검찰청 1인 시위 & 공대위 현황 확인
- 2)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내일 오전 검찰청 방문 및 민변의 성명발표 조직
- 3)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 삼성의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정리
- 4) 의원실 차원 정치사업 - 노회찬 의원(언론기고, 법무부 업무보고 활용) 심상정의원(재경위 활용)

보고5. 청년학생 본부 소속 청년위 방북사업 보고

○ 청년위 보고

○ 지적사항

- 방북의 목표와 내용, 취지 등에 대해 결과보고 시 풍부하게 보고함.

보고6. 당 대회 행사 준비팀 구성 보고

○ 기초실 보고

안전1.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원안통과

○ 개정안

제1장 총칙

제5조(중앙당 당직자의 임기) 최고위원회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안전2. 2006년 정세 및 사업방향의 건

- 정세전망 관련 제1정책조정위원회 국장 박철한 브리핑
- 사업방향 관련 기획조정실장 방석수 브리핑
- 차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 정세전망 관련 보완 사항
 - DDA 협상 전망 등 경제전망의 추가
 - 노동 농민 등 주체 정세의 추가

안건3. 지방선거 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장 방석수 브리핑
- 차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기타

- 2006년 2월 10일(금) 오전 9시 제10차 최고위원회 개최.

■ 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6년 2월 10일 09시
- 장소 : 중앙당
- 참석 : 김선동, 강병기, 홍승하, 박인숙, 김은진, 이용대, 이해삼 최고위원
- 불참 : 천영세(국회), 김기수, 김성진, 심재욱(출산휴가)

□ 보고

1. 7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자료 대체.
2. 대표선출 후 주요일정 보고
모란공원 방문, 기자회견 등의 일정보고

□ 안건

1. 2005년 사업보고의 건

〈결정사항〉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되 8차 최고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 1.13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토론된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 보완하기로 함.

2. 2006년 예산안 건

〈결정사항〉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되 1월 13일 최고위원회 워크숍 전까지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함.

3

의원단 총회 결과 보고

4

당원현황 보고

5

세액공제 사업 보고